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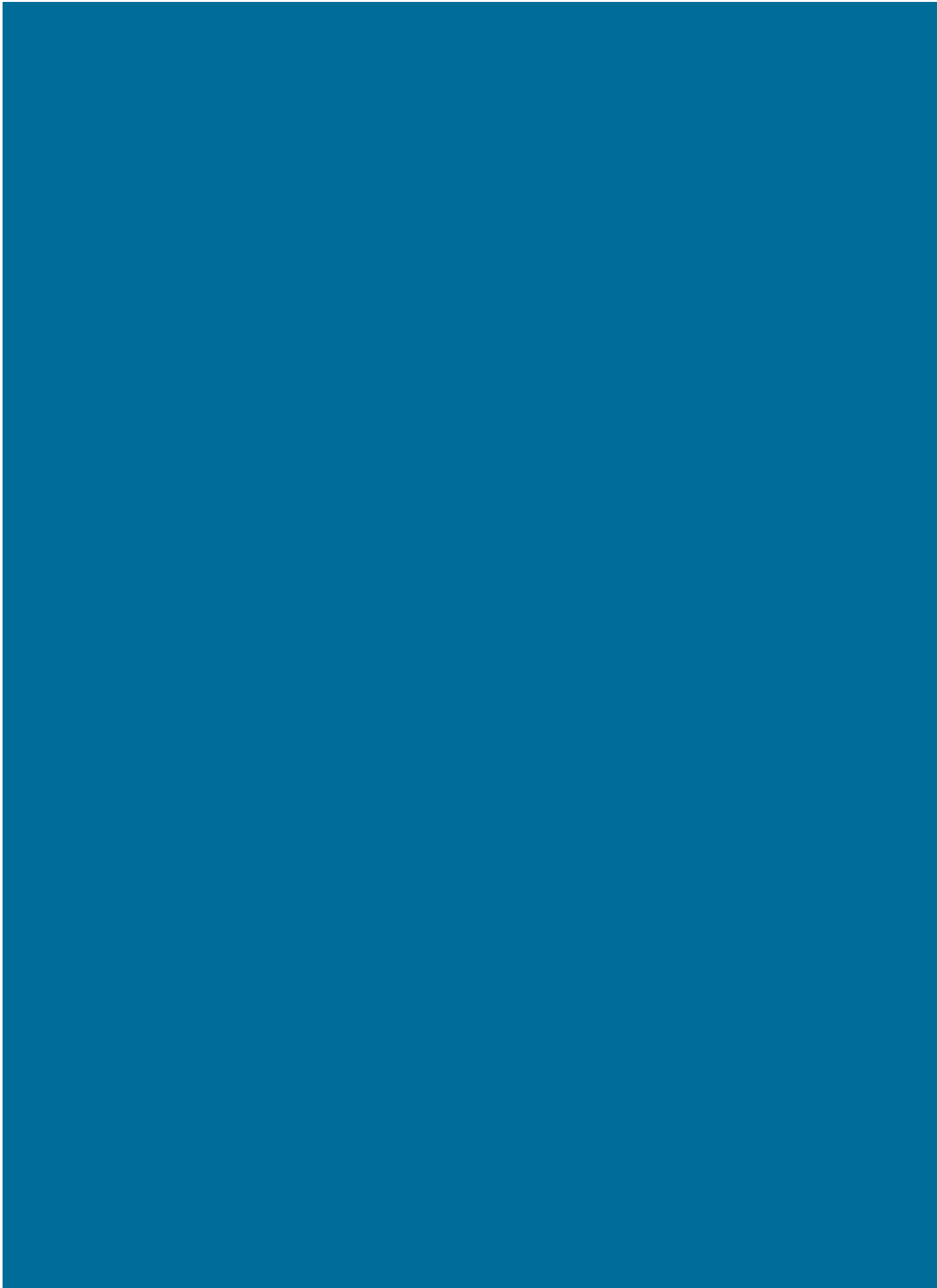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5. 1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5. 12.

연구책임자_ 오 경 석

공동연구원_ 고 형 면
이 경 숙

연구보조원_ 양 해 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

펴낸이_ 오경석

엮은이_ 이경숙

펴낸날_ 2015. 12.

펴낸곳_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번 (초지동 667-2) 4층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전화_ 031-492-9347

전송_ 031-492-9349

누리집_ www.gmhr.or.kr

꾸미고 짚음_ 윤기환 (070.7716.832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 이 책의 독창적인 내용을 허가 없이 마음대로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주민과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개발기관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 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정책개발과정에서 외국인주민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 외국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
- 인권 상담과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방안 연구

목적과 필요성

「2015년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으로 기획되었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목적론이나 당위론 이상이 필요하다. 사회통합은 분석적으로 재규정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행위자들의 실태와 욕구 파악이 선행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적 특성, 행위자들의 성격,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욕망 등에 따라 사회통합이라는 목표와 그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이 다원적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조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서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의 실태를 파악한다. 모든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적 범위에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외국인주민 일반의 사회통합 실태와 더불어 지역적 차이를 추출해보고자 할 것이다.

둘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촉진 및 장애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어떤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과 맥락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지를 분석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할 것이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친화적인 사회통합모델을 제시한다. 그것은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의 재개념화를 시도하는 일과 사회통합의 지역적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과제를 통해 우리는 경기도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정책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차별성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수행된 기존 조사들과 달리 경기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곧 경기도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경기도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는 점이다. 그를 바탕으로 우리는 추상적인 수준의 실태 파악이나 목적론적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넘어서 경기도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추상적인 정책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공간이며, 전국 최대의 외국인주민 거주지역이자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지역은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실태와 방식, 결정(촉진 및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친화적이며, 당사자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사회통합 정책입론을 모색하기 위한 최적의 공간에 해당한다.

조사 내용과 방법

우리 조사의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 설문 조사(Survey research), 면접 조사(interview) 및 현지 조사(Field work) 등이다.

이 조사는 사회통합을 네 가지 차원으로 재개념화하였다. 참여(participation), 관계(relationship), 역능성(social empowerment), 포용(inclusion)의 네 영역이 그것들이다. 이들 네 영역은 외국인주민의 정치·사회 참여, 사회적 소통과 신뢰, 역량의 발휘, 경제·사회·문화적 비배 제성 등과 조응한다.

참여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며 사회 및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서 사회통합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관계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상호 교류와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영역이다. 역능성은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사회적 관계와 결합하여 얼마나 잘 발휘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범주이다. 포용은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어느 정도나 접근이 가능한지를 측정하기 위한 범주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외국인주민'이다. 도내 7곳의 외국인 집주지역에 거주하는 560명의 외국인 주민이 이번 조사의 주요한 조사 대상이다. 외국인주민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취득자도 포함된다. 전자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가 해당되며, 후자에는 혼인귀화자가 해당한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미등록 외국인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도내 7곳의 외국인 집주지역은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등이다.

6개 영역 3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13개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며, 도내 7곳의 외국인 밀집시군 포함 총 14개 시군, 17개국 출신의 외국인주민 560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를 기계적으로 계량화하거나 추상적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인터뷰와 11개 관련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지역적 형평성과 우리 연구진과의 관계성(rapport)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였다. 서울시의 다섯 개 기관이 포함된 것은 미등록 아동 및 싱글맘 보호 시설 운영에 있어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선행연구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사회통합 개념에 대한 연구, 지표 개발과 관련된 연구, 사회통합지표에 근거해 사회통합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국내 학자들의 사회통합 국제 비교 및 해외 사례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유럽과 미국,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사회통합 정책의 이론적 근거, 특징과 핵심 내용, 전달 체계, 한국 사회 적용가능성 등이 연구 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의 다민족 정책, 미국의 소수인종 통합정책, 네덜란드와 독일의 이민자 통합정책의 내용을 주로 소개하였고, 호주, 영국, 독일 등 국가별 사회통합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사회통합정책의 준거로 상호성, 사회통합정책의 보편성 확보, 사회통합 추진에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였다.

우리 조사의 차별성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대상의 포괄성이다. 선행 연구들 대부분은 연구 대상을 특정한 외국인 집단(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영주권자 및 귀화자, 중도입국자녀 등)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 연구의 조사 대상에는 외국인주민 전체와 미등록 이주민이 포괄된다. 둘째 기존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2차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좀 더 현실감있는 실태 파악과 실현가능한 정책 모색을 위하여 직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셋째 구체적인 비교가능한 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 대상 지역을 경기도의 외국인 집주지역으로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에의 접근성 및 응답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주민들과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는 지원단체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 개인 사항

이번 조사는 응답자 개인 정보로 ‘성별, 연령, 사증종류, 체류기간, 거주지역, 경제활동지역, 고용 여부, 수입, 동거 여부 및 대상, 혼인상태, 주거형태, 주거방식, 생활비, 학력, 종교’ 등을 물었다.

전체 560명의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381명(68%), 여성 168명(30%)이었다.

연령 분포는 21세에서 30세 사이가 전체 응답자의 48%로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82%가량이 21세에서 40세 사이로 젊은 층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포천시, 시흥시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 사증 형태는 등록 외국인이 전체의 83.8%로 압도적이었다. 미등록은 8.3%, 귀화자는 2.8%에 불과했다. 무응답을 미등록에 포함시키는 경우 조사 대상자 가운데 미등록은 17.9%에 달한다. 2015년 7월 현재 한국 거주 기간은 1년에서 2년 이하가 20.5%로 가장 많았고 1년 이하가 18.2%로 그 뒤를 이었다. 5년 이상 체류자들의 전체 규모 역시 21.1%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응답자의 74.5%는 현재 취업중이었으나 14.3%는 실업 상태였다. 현재 실업 상태인 이유에는 원할하지 못한 구직 활동, 자녀양육, 한국어 문제, 외국인 차별 등이 선택되었다. 지난 달 총 수입은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 사이가 71.7%로 압도적이었으며, 그 다음은 1백만 원 미만으로 14.6%였다. 생활비 항목 중 가장 큰 것은 식료품비로 42.5%였으며 주거비 12.1%, 자녀교육비 8.9% 등이었다.

응답자의 48.9%는 기혼자였으며 43.0%는 미혼자였다. 동거인은 가족 35.5%, 직장동료 30.0%였으며 단독으로 거주하는 비율은 14.5%에 불과했다. 동거하는 가족의 유형으로는 배우자가 36.2%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15.0%로 그 다음이었다.

주거 형태는 공장 내 기숙사가 36.6%로 가장 많았으며 원룸 13.8%, 컨테이너 13.4%, 아파트 13.2%, 주택 11.3%, 고시원 2.5%, 여관 1.8%의 순이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 전형적인 주거 전용 시설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4.5%에 불과했다. 주거방식은 무료임차가 46.3%로 압도적이었으며 월세가 30.9%로 그 다음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집 10.5%, 전세 7.5% 순이었다.

출신국에서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2년제 대학졸업 17.9%, 중학교졸업 16.3%의 순이었다. 종교 분포는 불교 40.0%, 개신교 14.5%, 이슬람교 13.2%, 천주교 9.8%의 순이었다.

○ 전반적 사항

참여, 관계, 역능, 포용 등 이번 조사가 조작적으로 재정의한 사회통합의 네 가지 차원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한국 사회 전체의 외국인 사회통합의 여건 혹은 맥락에 대한 평가나 태도를 가늠해보기 위해 ‘전반적 사항’이라는 제하에 몇 가지 선행 질문을 던져 보았다. ‘한국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편안한 공간, 차별요소,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그 문항이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한국어가 60.5%로 압도적으로 선택되었다. 그 다음은 경제적 자립 19.3%, 이웃에 대한 신뢰 5.2% 등의 순이었다.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으로는 외국인 지원단체 32.0%, 종교 시설 16.4%, 공공 시설 13.9%, 직장/일터 12.9%, 공동체 모임 12.0% 등이었고 마트 등 상업시설은 5.7%에 그쳤다.

한국 사회 생활에서 문제되는 요소들을 묻는 문항의 경우 약간 문제라는 응답과 매우 큰 문제라는 응답을 더한 비율이 언어 74.3%, 경제력 46.8%, 인종 31.5%, 피부색 19.7%, 종교 16.6%, 출신국가 5.7%의 순이었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공정하다는 응답자가 70.0%로 공정하지 않다라는 응답자 26.1%를 압도했다.

○ 참여

한국의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 정도도 약간 있다거나 혹은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해준 응답자가 전체의 72.2%로 관심이 별로 혹은 전혀 없다 라고 답한 응답자 26.9%를 압도했다.

현재 참여하는 모임의 유형으로는 모국인 모임 73.4%, 직장동료 모임 64.1%, 가족이나 친척 모임 45.5%, 거주지 주민 모임 34.5% 순이었다. 향후 참여 의사가 있는 모임의 유형은 지역자원봉사단, 지역스포츠클럽, 방범기동순찰대, 통반장활동의 순이었다. 한국에 체류하고 싶은 기간으로는 영주거주 29.3%, 4년에서 6년 25.7%, 10년이상 15.7%, 1년에서 3년 15.2%, 7년에서 9년 10.9%의 순이었다.

○ 관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가 55.4%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 내 가족 또는 친지 15.4%, 직장동료 8.6%, 한국 내 친구 또는 이웃 7.1%, 공무원 2.5%의 순이었다. 신뢰하는 대상으로 선택된 집단은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 공무원, 직장동료, 한국인 친구, 고용주, 이웃, 한국인을 제외한 친구의 순이었다. 사용하는 매체 관련해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78.4%, TV 60.4%, 인터넷 카페 42.9%, 블로그나 개인홈페이지 37.1%의 순이었다. 이사 횟수는 1회 미만이 35.4%로 가장 많았고 2회 20.2%, 3회 14.3, 4회 4.8%의 순이었다.

○ 역능성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이 ‘약간 있다’고 답해준 응답자들은 46.3%였고, ‘매우 있다’라고 답해준 응답자들도 23.6%에 달해, 전체적으로 69.9%의 응답자들은 동네 소속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도와 관련 약간 만족 56.8%, 매우 만족 27.5%로 전체적으로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무려 84.3%에 달했다.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응답은 12.0%,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

공공 및 상업 시설의 단독 탐방 능력을 묻는 문항의 경우 대체로 매우 높은 탐방능력을 보여주었다. 백화점이나 시장 등 상업 시설 탐방 능력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91.8%에 달했으며, 문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주민센터나 파출소 등 공공 기관의 탐방 능력 역시 70.9%에 달했다.

문제나 오해가 생겼을 때, 한국어로 항의할 수 있는 능력의 경우 조금 그렇다 51.3%, 별로 그렇지 않다 25.3%, 전혀 그렇지 않다 2.5%, 매우 그렇다 12.3%의 순으로, 조금 혹은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63.6%를 차지했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33.9%였다.

○ 포용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는 정도를 묻는 문항의 응답지는 조금 그렇다 51.4%, 별로 그렇지 않다 21.3%, 매우 그렇다 19.8%, 전혀 그렇지 않다 6.4%의 순이었다.

차별 공간과 관련 직장 및 일터, 거리나 동네, 공공기관, 상점 등 상업 시설, 외국인 지원단체의 순으로 차별이 경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대한 평가와 관련 일자리, 출신국 사람들의 규모, 생활 환경, 주거 비용, 외국인 지원단체, 외국인 관련 행정서비스, 자국어 사용 등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은 생활 환경과 외국인 행정서비스 영역이다. 일자리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주거 비용은 모든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모국 문화 향유에 대한 평가 역시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압도했다. 응답자들의 77.2%는 편하게 모국의 음악이나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답해주었다. 모국 음식 먹기나 모국 종교 생활 유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모국 전통의상 입고 외출하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58.9%로 모든 항목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 요인 분석

- **한국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문제가 되는 요소들에 대한 응답지를 분석한 결과 ‘인종/피부색’, ‘종교’, ‘언어’라는 세 가지 유의미한 요인들이 추출되었다. 이 가운데 ‘인종/피부색’ 요인의 설명 변량이 21.6%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뢰대상 집단에 대한 요인 분석:** 신뢰대상 집단에 대한 응답지를 분석한 결과 이웃/한국인 친구,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 직장동료 등 세 가지 유의미한 요인들이 추출되었다. 이웃과 한국인 친구 요인의 설명력이 무려 29.1%로 다른 두 가지 요인의 설명력을 압도했다.
- **차별 장소에 대한 요인 분석:** 차별 장소에 대한 응답지를 분석한 결과 거리상점공공기관과 외국인 지원단체 라는 두 가지 유의미한 요인들이 추출되었다. 두 가지 요인의 설명력은 거리상점공공기관 요인이 32.5%, 외국인 지원단체 요인이 23.7%였다.

○ 상관 관계 분석

- **성별 차이:** 성별 ‘인종/피부색’ 문제를 경험한 정도에 대한 t-test 검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인종/피부색’ 차별을 더 큰 문제로 여기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모임 참여도에 관한 t-test 검증 결과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도가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만 향후 모임 참여 의사에 있어서는 t-test 검증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의사가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연령별 차이:** 분산 분석 결과 41세 이상 집단이 18에서 30세, 31에서 40세 집단에 비해 모임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향후 지역 활동 참여 의향과 관련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41세 이상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향후 지역 활동 참여의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증에 따른 차이:** 사증의 유형(등록, 미등록, 귀화)에 따른 ‘인종/피부색’ 문제 인식, 지역의 공공 기관 및 상업 시설 단독탐방능력 간의 관계를 분산 분석한 결과 귀화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인종/피부색’ 문제를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독탐방능력의 경우는 미등록 집단이 등록 집단 및 귀화 집단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차이:** 대부분 지역의 응답자들이 외국인 지원단체를 편안한 공간으로 선호하는 데 반해 시흥시 거주자들은 직장 및 일터를, 양주시 거주자들은 종교 공간을 편안한 장소로 인지하고 있었다. 평택시 거주자가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거주자보다 모임 참여도가 낮았으며 화성시 거주자는 안산시 거주자나 기타 지역 거주자보다 향후 지역 사회 모임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 거주자는 화성시나 평택시 거주자보다 ‘이웃/한국인 친구’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양주시 지역 거주자가 안산시/시흥시 거주자에 비해 거주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임이 확인되었다. 기타 지역 거주자가 포천시/양주시 거주자에 비해 모국 문화 향유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체 이용(‘관계’)과 다른 요소들과의 상관관계:**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이웃/한국인 친구’를 더 신뢰하며 각종 모임 참여에 적극적이고 향후 지역모임 참여 의사 역시 능동적임이 확인되었다.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인종/피부색 요인이 한국 사회 생활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정책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 라고 평가하는 집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매체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향의 능력이 ‘조금 불가능’한 집단이 ‘매우 가능’한 집단 및 ‘전혀 불가능’한 집단에 비해서 매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의 공정성 평가(‘일반’)와 다른 요소들과의 상관관계:**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매우 공정’하다고 느끼는 집단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집단에 비해 인종/피부색 관련 문제를 더욱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집단이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집단에 비해 거리/상점/공공기관에서 차별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정책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모국문화 향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정책이 ‘매우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집단이 ‘조금 공정’하다고 평가하거나 ‘별로 공정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집단에 비해 거주 지역의 일자리 상황 등등을 만족스럽다 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삶의 만족도(‘역능’)와 다른 요소들과의 상관관계:** 현재의 삶에 ‘매우 만족’하는 집단이 ‘약간 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종 및 피부색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존중감(‘포용’)과 다른 요소와의 상관관계:** 덜 존중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거주지역에 대한 평가(일자리 등등)가 나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매우 존중’ 받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거주 지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존중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모국 문화 향유가 불편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 **동네 소속감 및 한국어 향의 능력(‘역능’)과 다른 요소와의 상관관계:** 동네 소속감이 큰 집단이 상대적으로 동네 소속감이 약한 집단에 비해 단독 탐방 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한국어 향의 능력이 큰 집단 역시 낮은 집단에 비해 단독 탐방 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참여’)과 다른 요소와의 상관관계:** 한국의 정치 사회 현안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모국 문화를 좀 더 편안하게 향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 **포용과 참여 요소 사이의 다중회귀 분석:** 거주 지역의 생활 환경(일자리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국 문화 향유가 편안하다고 생각할수록 대중 매체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및 사례 조사

11개 기관, 9명의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설문 조사를 위해 조작적으로 정의했던 ‘사회통합’의 네 가지 구성 요소 중 외국인주민의 역능을 강화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포용하며, 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능활동의 주된 내용은 언어 역량 강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이주자 2세대의 역량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언어역량은 한국에서의 기본적 생활, 학업 성취와 직업능력 개발, 더 나은 취업활동을 위한 필수 역량이다. 다수의 외국인 지원기관들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기북부지역과 같이 인프라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고려인과 같이 한국어 집중 지원이 필요한 그룹 등 지역별, 대상별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언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취약그룹 및 취약지역을 발굴하는 일이 선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근거로 일상적인 민원처리 과정에서부터 사법, 의료등 중대한 사안에 이르기까지 신뢰할만한 공적 통번역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한다.

경제적 자립은 외국인 사회통합의 핵심영역 중 하나이다. 민간단체들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맞춤형 직업교육과 일자리 매칭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주민 당사자들의 네트워크가 사회통합 전달 체계에 적극적으로 포용될 때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주자 2세대가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접근과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기피와 같은 정서적인 이유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내국인과 달리 적용되는 행정시스템 으로 인한 불편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책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미혼모 입소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 미혼모, 아동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외국적 아동, 청소년,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외국적 아동 등 현행법상 사회안전망에 포섭되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이주민 2세대의 포용은 향후 사회통합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외국인주민의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내국인 주민과 공동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나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진다. 활동가들은 당위만으로는 참여 활동을 촉진할 수 없으며, 내외국인 모두가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소속감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함께 풀어나가야 할 생활의제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조사 결과 전체 요약 및 정책 제언

○ 몇 가지 시사점

- **비제도적인 사회통합의 확산:** 이번 조사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사회통합의 네 가지 차원 곧 참여, 관계, 역능, 포용 등의 영역에서 응답자들의 선택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그것은 모든 외국인을 사회통합 정책의 대상으로 포용하지 않는 제도적 한계나 우리 사회의 통념 혹은 기존의 연구 가설들과 달리 외국인주민들의 한국 사회통합이 실질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 **열악한 생활 환경:**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이 참여나 관심을 넘어 역능과 포용에 이르기까지 사회통합의 여러 영역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답변들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 환경 자체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입은 낮은 편이었으며 비정규 고용 상태에 있는 외국인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주거 환경은 매우 불안정했으며, 주거 이전의 자유 역시 제한된 편이었다.
- **욕구의 다원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외국인주민 혹은 이주민이라고 통칭될 수 있는 집단의 욕구가 결코 동질화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성, 연령대, 체류 자격 및 거주 지역에 따라 그들의 사회통합 정도와 수준은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외국인주민들의 욕구와 관련해서 이번 조사에서 우리가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그들의 욕구가 한국인 연구자나 활동가, 정책 관계자의 관점과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이었다. 생활 환경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었고, 연구 가설과는 다르게 높은 장소귀속감(동네 소속감)도 보여주었으며, 지역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한국인 학자들이 ‘다문화 정책의 합리적 핵심’으로 강조하는 ‘모국 문화 향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 **사회통합 촉진 요인:** 참여, 관계, 역능, 포용 등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네 가지 영역들 사이에는 대체로 정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요소는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와 미디어 이용율이었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매우 공정’하다고 느끼는 집단은 다른 집단 보다 지역 상황 및 모국 문화 향유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이었다.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외국인주민일수록 ‘이웃/한국인 친구’를 더 신뢰하며 각종 모임 참여에 적극적이고 향후 지역 모임 참여 의사 역시 능동적임이 확인되었다.
- **강화된 역량과 생활 세계에서의 인종 차별:** 이번 조사는 외국인주민들이 기존의 조사들에 비해 자기 역량을 매우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시켜주었다. 외국인주민들의 ‘단독

탐방 능력'과 '한국어 향의 능력'이 우리가 기대한 것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외국인주민들의 사회통합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인종/피부색' 차별 요인이다. '인종/피부색' 차별 요인은 비제도적 영역에서 자원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의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 정책 제언

-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 제도적인 사회통합과 비제도적인 사회통합, 전반적인 사회통합과 지역 사회에서의 구체적인 사회통합, 주관적인 사회통합과 생활 세계에서의 일상적인 사회통합들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과제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이며 전면적으로 사회통합 정책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 **보편적 서비스와 특화된 서비스의 조화:** 사회통합 정책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화, 개별화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인 서비스와 지역적이며 개별적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목록을 몇 가지로 제한하고 기타 서비스 기획 및 실행의 주도권을 지역 사회에 이양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 **당사자 리더의 발굴과 양성:** 우리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그러한 사회통합 인터페이스 리더 후보군은 능동적인 외국인주민 매체 이용자들이다. 또 다른 인터페이스 공간의 리더들은 결혼이주민을 비롯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그룹(결혼이주민, 자영업자, 영주권자 등)이 될 수 있다.
- **일방적인 서비스에서 교류의 장 활성화로:** 사회통합은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상호적인 과정이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 사이의 단순한 접촉점을 형성하는 일을 넘어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사회 소속감과 결속력, 경쟁력과 연대감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간의 혼합,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구성원들간의 평등과 민주주적 관계의 형성, 모든 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 공통의 욕구와 목표의 설정 등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 **촉진 요인의 활성화와 장애 요인의 최소화:** 촉진 요인과 관련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정책 수요자들의 동의와 지지 기반 확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외국인주민 소셜 미디어 유저들을 정책의 키플레이어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통합 정책은 단순히 도구적인 서비스 목록을 추가하는 일을 넘어서서 외국인주민들의 존

중감과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일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 요인과 관련 가장 주목해야 하는 요인은 인종/피부색 차별 요인이다.

- **외국인의 지역사회통합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관련한 공공 부문의 그간 간과되어 왔던 매우 중요한 역할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이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외국인주민들의 태도가 사회통합의 여러 요소들과 매우 긴밀하게 상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은 정책 구상과 집행으로 제한된 역할에서 정책 실행 및 홍보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또 그 과정을 외국인주민들과 공유하고 정당성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일을 주요 커리큘럼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과제

-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균형잡힌 정보와 인식이 중요하다. 그를 근거로 사회통합에 대한 선형적이며 환원론적인 접근은 지양되어야만 한다. 성공적인 사회통합 정책은 정책 효과를 제고시킴과 더불어 연구자나 정책 관련자들에게조차도 공유될 수 있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비현실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한계는 성인 외국인주민으로 조사 대상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사회통합이 '보편적인 사회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회통합 조사에는 한국인 주민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주민 2세대 곧 이주 아동 및 청소년들 역시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차례

I. 조사 개요 _027

1. 목적과 필요성 _028
2. 조사 내용과 방법 _032
 - 1) 사회통합의 개념화 _032
 - 2) 조사 내용 _034
 - 3) 조사 대상과 방법 _036
 - (1) 조사 대상 _036
 - (2) 조사 방법 _037
 - ① 설문조사 _038
 - ② 전문가 인터뷰 및 사례(현지) 조사 _041
 - 4) 기대효과, 활용 방안 및 추진 일정 _041
 - (1) 기대효과, 활용 방안 _041
 - (2) 추진 일정 _042

II. 선행 연구 _043

1. 국내 연구 _044
2. 국제 비교 및 해외 사례 _045

III. 설문 조사 결과 _049

1. 사회통합 실태 _050
 - 1) 개인 사항 _050
 - 2) 전반적 사항 _056
 - 3) 참여 _058
 - 4) 관계 _060
 - 5) 역능성 _062
 - 6) 포용 _065
2. 분석 _068
 - 1) 요인 분석 _068
 - (1) 한국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요인 분석 _068
 - (2) 신뢰대상 집단에 대한 요인 분석 _069
 - (3) 차별 장소에 대한 요인 분석 _070
 - 2) 상관관계 분석 _071
 - (1) 성별차이 _071
 - (2) 연령별 차이 _071
 - (3) 사층의 차이 _072
 - (4) 지역별 차이 _073

- 3) 사회통합 영역들 사이의 관계 _075
 - (1) 매체 이용율과 다른 요소와의 상관관계 _075
 - (2)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 평가(일반)와 다른 요소와의 상관관계 _077
 - (3) 삶의 만족도(역능)와 다른 요소와의 상관관계 _079
 - (4) 존중감(포용)과 다른 요소와의 상관관계 _079
 - (5) 동네 소속감(역능)과 다른 요소와의 상관관계 _080
 - (6)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과 다른 요소와의 상관관계(참여와 역능) _081
 - (7) 포용과 참여 요소들 사이의 다중회귀 분석 _081
- 3. 요약과 시사점 _082

IV. 인터뷰 및 사례조사 결과 _085

- 1. 역능 활동 _087
- 2. 포용 활동 _093
- 3. 참여 활동 _095
- 4. 요약과 시사점 _098

V. 정책제언 _101

- 1. 몇 가지 시사점 _102
 - 1) 비제도적인 사회통합의 확산 _102
 - 2) 열악한 생활환경 _102
 - 3) 욕구의 다원화 _103
 - 4) 사회통합 촉진 요인 _103
- 2. 정책 제언 _105
 - 1)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 _105
 - 2) 보편적 서비스와 특화된 서비스의 조화 _105
 - 3) 당사자 리더의 발굴과 양성 _106
 - 4) 일방적인 서비스에서 교류의 장 활성화로 _106
 - 5) 촉진 요인의 활성화와 장애 요인의 최소화 _107
 - 6) 외국인의 지역사회통합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_108
- 3. 과제 _109

참고 문헌 _111

설문조사지 _117

표 차례

- 〈표 1〉 경기도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현황 _031
- 〈표 2〉 국내 학자들의 사회통합 개념 _033
- 〈표 3〉 사회통합 조사 항목 _035
- 〈표 4〉 경기도 내 7개 외국인 집중지역 _036
- 〈표 5〉 현지 조사 대상 기관과 인터뷰 대상자 _037
- 〈표 6〉 조사 방법, 대상, 내용 _038
- 〈표 7〉 설문문의 구성 _038
- 〈표 8〉 국적별 응답자 분포 _039
- 〈표 9〉 시군별 응답자 분포 _039
- 〈표 10〉 샘플링 가이드라인 _039
- 〈표 11〉 설문조사 협력기관 _040
- 〈표 12〉 현지 조사 대상 기관과 조사 내용 _041
- 〈표 13〉 조사 추진 일정 _042
- 〈표 14〉 성별 분포 _050
- 〈표 15〉 연령대별 분포 _050
- 〈표 16〉 주거 지역 _051
- 〈표 17〉 응답자의 경제 활동 지역 _051
- 〈표 18〉 사증 형태 _052
- 〈표 19〉 체류기간 _052
- 〈표 20〉 고용 상태 _053
- 〈표 21〉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_053
- 〈표 22〉 한 달 수입 규모 _053
- 〈표 23〉 생활비 지출 항목 _054
- 〈표 24〉 혼인 여부 _054
- 〈표 25〉 동거자의 형태 _054
- 〈표 26〉 동거 가족 유형 _055
- 〈표 27〉 주거 형태 _055
- 〈표 28〉 응답자의 주거 방식 _056
- 〈표 29〉 한국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_056
- 〈표 30〉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_057

- <표 31> 한국 생활의 문제 요소들 _057
- <표 32> 한국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_058
- <표 33> 한국의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 정도 _058
- <표 34> 현재 참여하는 모임의 유형 _059
- <표 35> 향후 참여하고 싶은 모임의 유형 _059
- <표 36> 한국에서의 희망 체류 기간 _060
- <표 37>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 요청 대상 _060
- <표 38> 신뢰하는 대상 유형 _061
- <표 39> 사용하는 매체의 종류 _062
- <표 40> 한국에서 이사 횟수 _062
- <표 41>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 요청 대상 _063
- <표 42> 현재 삶 만족도 _063
- <표 43> 공공 및 상업시설 단독 탐방 능력 _064
- <표 44> 문제나 오해 발생시 한국어 향의 능력 여부 _065
- <표 45> 한국사회에서 존중받는 정도 _065
- <표 46> 차별 공간 _066
- <표 47> 거주 지역에 대한 평가 _066
- <표 48> 모국 문화 향유에 대한 평가 _067
- <표 49> 한국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에 대한 요인 분석 _068
- <표 50> 한국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요인들의 설명력 _069
- <표 51> 신뢰대상 집단에 대한 요인 분석 _069
- <표 52> 신뢰 대상 요인들의 설명력 _070
- <표 53> 차별 장소에 대한 요인 분석 _070
- <표 54> 차별 장소 요인들의 설명력 _070
- <표 55> 인종피부색 차별 요인, 참여모임 및 희망 모임에 대한 성별 t-test 검증 결과 _071
- <표 56> 연령별 모임 참여도 차이에 대한 분산 분석 _071
- <표 57> 연령별 향후 지역 모임 참여 의향의 차이에 대한 분산 분석 _072
- <표 58> 사증 유형별 인종/피부색 문제 인식 정도의 차이 _072
- <표 59> 사증 유형별 단독탐방능력의 차이 _072
- <표 60> 거주 지역과 편안한 공간의 교차표(카이제곱) 검증결과 _073

표 차례

- 〈표 61〉 거주지역별 현재 모임 참여 정도의 차이 _073
- 〈표 62〉 거주지역별 향후 지역 모임 참여 의사의 차이 _074
- 〈표 63〉 거주지역별 이웃/한국인 친구에 대한 신뢰 정도의 차이 _074
- 〈표 64〉 지역별 거주지 평가에 대한 차이 _074
- 〈표 65〉 지역별 모국 문화 향유에 대한 평가 _074
- 〈표 66〉 지역과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 간의 교차표 검증 결과 _075
- 〈표 67〉 매체 이용과 이웃/한국인 친구 신뢰 요인 사이의 회귀 분석 결과 _076
- 〈표 68〉 매체 이용과 현재 모임 참여 간 회귀 분석 결과 _076
- 〈표 69〉 매체 이용과 현재 모임 참여 간 회귀 분석 결과 _076
- 〈표 70〉 매체 이용과 인종/피부색 문제 인식 사이의 회귀 분석 결과 _077
- 〈표 71〉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와 매체 이용 사이의 분산 분석 결과 _077
- 〈표 72〉 한국어 향의 능력과 매체이용률 사이의 분산 분석 결과 _077
- 〈표 73〉 정책의 공정성 평가와 인종/피부색 문제 인식의 정도 _078
- 〈표 74〉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 평가와 주요 공간에서의 차별 체감 _078
- 〈표 75〉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 평가와 모국 문화 향유 _078
- 〈표 76〉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 평가와 거주지역 평가 _079
- 〈표 77〉 현재 삶 만족도와 인종/피부색 요소에 대한 문제의식 _079
- 〈표 78〉 존중받는 정도와 거주지역 평가 _079
- 〈표 79〉 존중받는 정도와 모국 문화 향유에 대한 평가 _080
- 〈표 80〉 사는 동네 소속감과 단독 탐방 능력 _080
- 〈표 81〉 한국어 향의 능력과 단독 탐방 능력 _080
- 〈표 82〉 한국의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과 모국 문화 향유 _081
- 〈표 83〉 거리상점공공기관차별감, 거주지역평가, 모국문화 향유와 이용매체유형 간의 다중회귀 분석 _081
- 〈표 84〉 현지 조사 대상 기관과 인터뷰 대상자 _086
- 〈표 85〉 방문 조사 기관의 역능 활동 _087
- 〈표 86〉 포용 활동 _093
- 〈표 87〉 참여 활동 _095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

I. 조사개요

1. 목적과 필요성

‘사회통합’은 최근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외국인 정책 관련 행위자 집단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의 중요한 키워드이다. 사회통합은 그간 견지되어 왔던 외국인에 대한 도구적, 실용주의적 관점을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된 구성원으로 그들의 위상과 역할을 재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압축되어 있는 용어이다.

사회통합은 개방, 인권, 안전, 협력과 더불어 법무부의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다섯 가지 핵심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법무부 2012). 사회통합은 가족, 성평등, 인권과 함께 2015년 여성가족부가 설정한 다섯 가지 핵심 과제 영역 가운데 한 가지이기도 하다(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2014). 행정자치부 역시 최근 ‘외국인 주민의 주민 등록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설동훈 외 2014).

사회통합이 외국인 정책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의 내용이 “이민자의 적응 및 정착”을 넘어 “역량 강화와 자립 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곧 외국인주민의 위상과 역할을 수동적인 서비스 대상에서 능동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재설정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정책의 키워드를 초기 적응 지원에서 사회통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매우 적절하다. 외국인 정책이 설계되었던 10여 년 전과 현재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체류 기간의 장기화, 직업의 다양성, 가족 단위 이주의 증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인들이 제도적 한계를 넘어 한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통합’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여러 조사들이 존재한다(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3, 정기선 2014, 한양대글로벌다문화연구원 2015). 이런 상황에서 초기 적응을 목표로 설계되었던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정책과 현실, 정책과 제도의 비일관성이 증폭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오경석 2014).

그러나 외국인 정책을 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탓이다. 사회통합은 공공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통합에 대한 합의된 개념 규정은 부재하다.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이 단순한 권리와 제도의 차원을 넘는 문화와 생활 세계의 의제요¹⁾, 사회 결속(social cohesion) 뿐만 아니라 사회 이동(social mobility)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일방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상호적 과정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목적론이나 당위론 이상이 필요해진다. 사회통

1) “이민자가 유입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적극 참여하며, 문화와 언어 및 종교 등 배경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받고, 기회에서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사회관계 속에 포용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는 상태” (김준현·문병기 2014).

합은 분석적으로 재규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 관련 행위자들의 실태와 욕구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선행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적 특성, 행위자들의 성격,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욕망 등에 따라 사회통합이라는 목표와 그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이 다원적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하는 셈이다.

「2015년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기획되었다. 이 조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서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의 실태를 파악한다. 기존의 사회통합 실태조사들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수행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모든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적 범위에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외국인주민 일반의 사회통합 실태와 더불어 지역적 차이를 추출해보고자 할 것이다.

둘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촉진 및 장애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기존의 사회통합 담론들은 추상적인 수준의 실태 파악이나 목적론적 가이드라인의 제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는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어떤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과 맥락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지를 분석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할 것이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친화적인 사회통합모형을 제시한다. 그것은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의 재개념화를 시도하는 일과 사회통합의 지역적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과제를 통해 우리는 경기도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차별성은 경기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곧 경기도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경기도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는 점이다. 사회통합이라는 거시적인 외국인 정책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조사의 범위를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회통합이 제도 영역을 넘어 생활 세계 영역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의 교류와 연대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그 최적의 추진 체계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법제와 담론, 곧 사회 규범과 상징적 질서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앙 정부 혹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통합 정책의 실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와 달리 지역은 추상적인 정책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공간이다. 지역사회에서 이주민들은 탈인격화되고 분절화된 정책의 기표로 존재하는 대신 생활 세계의 주체이자 이웃으로 존재한다. 같은 지역의 노동자요, 소비자요, 납세자요, 학부모요, 세대주요, 주민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의 구분은 무의미하다(Takeyuki Tsuda 2006).

이런 이유로 “외국인의 정착 과정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체”는 바로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다(최병두 2012).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기조에 근거해 ‘합법과 불법’이라는 법적인 잣대가 사회통합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앙 정부에 비해 지방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은 훨씬 포용적이고 유연하다.

정책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중앙 정부의 법제와 달리 경기도의 지자체들에는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지역에 거소하는 모든 외국인을 서비스 대상에 포용(혹은 비배제)하는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²⁾. 지역사회와 다양한 공론장에 외국인주민들의 참여는 공식적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실제적인 참여율도 제고되고 있다³⁾. 지역친화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자적인 추진 혹은 전달 체계도 구축되어 있다⁴⁾. 최근에는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 하에 지역이 주도하는 사회통합 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⁵⁾도 모색 중이다.(오경석 2015)

경기도 지역에서 실질적인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모색과 지역친화적인 사회통합 모델 구성을 위한 실태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또 다른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외국인주민 거주지역이자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이라는 점에서 찾아진다.

주지하다시피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이주민 밀집지역이다. 2014년 12월말 현재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인구 규모는 554,160명으로 국내 외국인주민 인구 1,741,919명의 31.8%가 경기도에 체류한다. 출신 국가는 155개 국가에 달하며, 외국인근로자 228,836명(41.3%), 결혼이민자(혼인귀

	기본 인권조례 재정여부		외국인 인권조례
	외국인 명시	외국인 암시	
경기도		○	○
고양시	○		
광명시		○	
김포시		○	△난민지원조례(제정 후 재의로 폐기)
성남시		○	
수원시		○	
안산시		○	○

3) 2015년 7월 현재까지 도내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및 자문회의는 총 20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내국인 216명, 외국인주민 47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17개 지원협의회에 내국인 204명과 외국인주민 25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3개의 자문회의에 내국인 12명과 외국인주민 22명이 참가하고 있다. 2014년도 지원협의회는 총 31회가, 자문회의는 4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읍면동 단위의 주민 조직에 참가하는 외국인주민은 총 33개 읍·면·동(18개 시·군) 84명이다. 18개 주민자치위원회에 25명, 4개 통장협의회에 5명, 14개 부녀회에 17명, 2곳의 새마을금고에 3명, 8곳의 자율방범대에 34명의 외국인주민이 참여 중이다.

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남양주시, 안산시 등 도내 7곳의 외국인집주지역에 설치된 외국인복지센터.

5)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가 초안을 마련한 「외국인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화자 포함) 66,654명(12%)와 자녀 52,815(10%), 동포 100,221명(18.1%) 등으로 구성된다.

주목할 점은 도내 외국인주민의 규모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밀집지역 역시 급속하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12월 현재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이 전체 인구의 5% 이상 거주하는 시군은 안산시(10.5%), 시흥시(9.8%), 화성시(6.9%), 김포시(5.8%), 포천시(9.2%), 안성시(6.2%), 양주시(5.0%) 등 7 곳에 달한다.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무려 10개시군 21개소에 달한다. (표1)

〈표 1〉 경기도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현황 (2014.12 현재)

시군명	주민등록인구	비율	외국인 주민수	시군명	주민등록인구	비율	외국인 주민수
경기도	12,234,630	4.0%	492,790	마도면	6,348	26.2%	1,664
수원시	1,148,157	4.1%	47,237	팔탄면	10,655	41.5%	4,417
세류1동	4,196	79.7%	3,346	장안면	11,165	28.3%	3,160
매산동	12,132	21.8%	2,650	양감면	4,348	44.5%	1,936
고등동	12,105	30.6%	3,704	정남면	12,872	23.5%	3,024
성남시	979,534	3.0%	29,560	김포시	312,305	5.8%	17,968
수진1동	15,490	22.5%	3,489	대곶면	10,208	41.4%	4,227
안산시	713,666	10.5%	75,137	월곶면	5,610	25.9%	1,455
원곡본동	33,256	89.4%	29,726	포천시	156,603	9.2%	14,460
원곡1동	9,045	81.5%	7,375	가산면	8,590	41.8%	3,591
선부2동	23,944	27.8%	6,660	안성시	182,173	6.2%	11,211
평택시	442,034	4.9%	21,658	양주시	199,143	5.0%	9,950
서탄면	3,923	29.0%	1,139	은현면	7,226	21.7%	1,569
시흥시	396,765	9.8%	38,921	남면	7,475	22.0%	1,644
정왕1동	30,116	42.8%	12,880	동두천시	97,557	4.2%	4,105
정왕본동	24,043	61.1%	14,681	보산동	3,575	21.3%	761
화성시	530,251	6.9%	36,731				

이것은 경기도가 외국인주민들의 사회통합 실태와 방식, 결정(촉진 및 장애)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최적의 공간임을 뜻한다.

이번 조사의 또 다른 필요성은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을 주제로 하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몇

가지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우리 조사의 차별성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대상의 포괄성이다. 선행 연구 대부분은 연구 대상을 특정한 외국인 집단(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영주권자 및 귀화자, 중도입국자녀 등)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 연구의 조사 대상은 외국인주민 전체와 미등록 이주민이 포괄된다. 둘째 기존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2차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좀 더 현실감있는 실태 파악과 실현가능한 정책 모색을 위하여 직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셋째 구체적인 비교가능한 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 대상 지역을 경기도의 외국인 집주지역으로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에의 접근성 및 응답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주민과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는 지원 단체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2. 조사 내용과 방법

1) 사회통합의 개념화

사회통합은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개념이다. 곧 사회통합에 대한 단일하거나 통일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통합과 관련된 유사한 개념이 학자에 따라 그리고 각 국가의 관심 분야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고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이 외국인 정책의 보편적인 목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이유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회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성공, 공공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이라는 평가에 대한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와 국내 학자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규정들을 몇 가지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OECD는 사회통합의 규정에서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의 가능성 여부를 강조하며, 통합된 사회를 “사회구성원들의 복지를 향해 나아가고, 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소속감과 신뢰를 증진하며 구성원들에게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강신욱 2010).

국내 학자들의 경우 ‘능동적 적응’을 강조하는 제한적인 입장에서부터 ‘소속감과 정체감’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입장, ‘다양성과 상호성’을 강조하는 다문화적 입장과 ‘평등과 동질감’을 강조하는 규범적인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존의 개념들을 종합하면 ‘사회통합(정책)’은 이민자와 국민 간의 상호존중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상호 포용적인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상호 존중과 포용을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기반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생활 세계 및 심리적 차원에서도 통합된 상태의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통합은 구성원 간의 갈등 예방을 적극

적으로 지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삶의 기회와 결과에 있어서의 격차의 축소를 목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표2)

〈표 2〉 국내 학자들의 사회통합 개념

저자	내용	강조점
김이선 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통합 진전 양상과 정책 수요 분화에 관한 연구. 2012	국경을 넘은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직면하는 각종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사회성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역량과 자질을 갖추어 가는 '사회통합 과정'	능동적 적응
김영란, 다문화 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2013	사회통합은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한 사회에서 제한 없이 평등한 공동체로 진입시키는 과정. 이는 사회 내에서 여러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균열을 최소화하고 동질감을 갖게 하며 합리적인 합의절차와 결과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해야 함. 이 과정에서 사회통합은 서로 다른 집단들이 하나로 모이는 과정이며 일방적인 흡수가 아닌 자발적인 의지를 필요로 함.	평등과 동질감
차용호,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의 관계성 및 연계 방안 연구. 2009	상호성이 내재된 사회통합이란 사회의 동질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성이 존중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성원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상태이며, 제도적으로 상호성을 기초로 한 법과 제도가 마련된 상태	다양성과 상호성
전경옥,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측정. 2013	사회통합은 동화와는 다른 상호관계, 언어적 소통의 가능성, 문화적 공유의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의 가능성을 포괄하는 동의의 문제이며, 이주민의 사회문화 통합뿐만 아니라 이주국 국민들 쌍방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 따라서 사회통합은 사회적 연대와 사회발전을 근간으로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사회적 안정과 충성심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주민과 그들을 수용한 이주국의 상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	소통과 공유의 상호작용
설동훈·김명아,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2008	이민자가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국가에서 습득한 문화·가치와 우리나라의 문화·가치를 접목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역량 발휘
김준현 외,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비교 연구: 국가 간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2014	이민자가 유입국의 구성원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참여를 통해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는 과정. 즉, 이민자가 유입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적극 참여하며, 문화와 언어 및 종교 등 배경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받고, 기회에서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사회관계 속에 포용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는 상태소속감과 정체감	소속감과 정체감

사회통합에 관한 기존의 개념들을 참조하여 이번 조사는 사회통합을 “한 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결속된 상태”로 재정의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통합’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 혹은 집단이 상호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인정은 상대방의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포용에서 비롯된다.

이런 맥락에서 외국인의 사회통합은 한국사회로의 일방적인 포섭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영역에서 내외국인 사이의 민주적인 교류와 상이한 가치의 접목으로 규정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진정한 소통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상호 연결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에 가능하다. 이러한 상태가 보장된다면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은 자연적으로 뒤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재규정된 사회통합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네 가지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참여(participation), 관계(relationship), 역능성(social empowerment), 포용(inclusion)이 이번 조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된 사회통합의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이다.

참여는 체류 국가의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갖는 관심 여부로 측정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법제상 외국인의 정치 참여는 원칙적으로 봉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책 대상 조차도 “90일 이상의 합법적인 체류자”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계는 사회적 소통과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는 범주다. 사회적 소통과 신뢰의 정도는 공동체의 소속감과 유대감, 결속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역능성은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사회적 관계와 결합하여 발휘될 수 있는 정도, 곧 사회적 이동 가능성과 그에 동반되는 삶의 만족감 등을 측정하기 위한 범주이다. 포용은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접근이 가능한지, 다시 말해 어느 정도나 배제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범주이다.

2) 조사 내용

이번 조사의 주요한 내용은 참여(participation), 관계(relationship), 역능성(social empowerment), 포용(inclusion)이라는 사회통합의 네 가지 영역에서 외국인주민의 실태와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들 네 영역은 구체적으로 외국인주민의 정치·사회 참여, 사회적 소통과 신뢰, 역량의 발휘, 경제·사회·문화적 비배제성 등과 조응한다.

참여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며 사회 및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서 사회통합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 정도를 조사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공사모임에의 참여 정도를 파악해볼 것이다.

관계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상호 교류와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영역이다.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 간의 긴밀하고 다양한 관계망 형성과 활성화를 요청한다. 구성원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을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외국인 간의 관계망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의 관계망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후자를 통해 우리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국어 수다 모임이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역능성은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사회적 관계와 결합하여 얼마나 잘 발휘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범주이다. 외국인주민의 주체적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우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 소속감, 지역 시설의 단독 탐방 능력과 한국어 향의 능력 등을 포함시켰다.

포용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어느 정도나 접근이 가능한지를 측정하기 위한 범주이다. 심리적 포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존중받는 정도를, 공공 제도와 생활 세계 영역에서의 포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간별 차별의 정도를, 경제적인 포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의 일자리 여건에 대한 평가를, 문화적 포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국문화 향유 정도를 설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네 가지 요소와 더불어 우리는 조사 대상 외국인주민의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네 가지 사회통합 영역에 대한 응답지를 보다 거시적인 틀에서 맥락화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라고 여겨지는 ‘한국 생활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조사하였다. 개인 정보에는 성별, 연령, 사증, 체류기간, 거주지역, 경제활동지역, 고용여부, 수입, 동거, 혼인상태, 주거형태, 주거방식, 생활비, 학력, 종교 등이 포함되며, 전반적 상황에 대한 평가에는 한국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편안한 공간, 차별요소,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들 여섯 가지 범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산 분석, 상관 및 회귀 분석, 요인 분석 등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우리는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촉진 요인 및 장애 요인 그리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차이, 네 가지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할 것이다.

〈표 3〉 사회통합 조사 항목

분류	주제	조사내용	조사항목
1	외국인주민의 정치·사회 참여	- 외국인주민의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 파악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관심, 사적 모임, 공적 모임, 희망체류기간
2	외국인주민의 사회적 소통과 신뢰	- 외국인주민의 관계망의 크기와 소통 정도 파악 - 외국인주민의 한국 공공기관 및 내국인에 대한 신뢰 파악	도움요청대상, 신뢰하는 대상, 매체이용, 이사횟수
3	외국인주민의 역능성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사회적 관계와 결합하여 얼마나 잘 발휘될 수 있는지를 파악	동네소속감, 삶의 만족도, 탐방능력, 한국어향의능력
4	외국인주민에 대한 포용	- 외국인주민의 사회적 편견 경험 파악	존중감, 차별공간, 거주지역평가, 모국문화향유

5	결정요인 (촉진 및 장애)	- 요인 분석	전반적 사항(한국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편안한 공간, 차별요소, 정책의 공정성)+개인사항 추가 소개(성별, 연령, 사증, 체류기간, 거주지역, 경제활동지역, 고용여부, 수입, 동거, 혼인상태, 주거형태, 주거방식, 생활비, 학력, 종교)
---	-------------------	---------	--

3) 조사 대상과 방법

(1) 조사 대상

이번 조사의 대상은 ‘외국인주민’이다. 도내 7곳의 외국인 집주지역에 거주하는 560명의 외국인주민이 이번 조사의 주요한 조사 대상이다.

외국인주민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취득자도 포함된다. 전자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동포가 해당되며, 후자에는 혼인 귀화자가 해당한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미등록 외국인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미등록 외국인은 공식적인 외국인 정책의 대상은 아니지만, 규모와 사회통합의 정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기 때문이다.⁶⁾

도내 7곳의 외국인 집주지역은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등이다. (표4)

〈표 4〉 경기도 내 7개 외국인 집중지역 (2014. 12 현재)

시군명	주민등록 인구(명)	외국인 주민수(명)	비율
안산시	713,666	75,137	10.5%
시흥시	396,765	38,921	9.8%
화성시	530,251	36,731	6.9%
김포시	312,305	17,968	5.8%
평택시	442,034	21,658	4.9%
양주시	199,143	9,950	5.0%
포천시	156,603	14,460	9.2%

6) 행정안전부는 매년 수집하는 “외국인주민 통계 현황”의 조사대상을 ①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초과 체류자, ② (한국국적취득자)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③ (자녀)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로 정하고 있음

설문 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외국인주민과의 인터페이스 공간에서 지속적인 면대면 활동을 해 온 관련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와 종사자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현지 조사 대상 기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표5)

설문 조사 결과를 기계적으로 계량화하거나 추상적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국인주민과의 인터페이스 공간에서 지속적인 면대면 활동을 해 온 관련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와 종사자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조사에는 9명의 활동가와 11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조사 대상 기관은 지역적 형평성과 우리 연구진과의 관계성(rapport)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서울시에 위치한 다섯 개 기관이 포함된 것은 미등록 아동 및 싱글맘 보호 시설 운영에 있어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표5)

〈표 5〉 현지 조사 대상 기관과 인터뷰 대상자

연번	기관명	인터뷰 대상자	조사 범주
1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장동만 부장, 이은선 팀장, 김설이 팀장	역능, 포용
2	아시아인권문화연대(부천)	이완 대표	참여
3	밀알어린이집(부천)	송연순 원장	포용
4	지구촌 어린이집(서울)	김현숙 피디	역능, 포용
5	이주민방송MNTV(서울)	김현숙 피디	역능, 참여
6	지구촌 학교(서울)	김현숙 피디	역능, 포용
7	지구촌 그룹홈(서울)	김현숙 피디	포용
8	이주여성지원센터(서울)	김현숙 피디	포용
9	고려인 야학 너머(안산)	신기현 팀장	역능, 포용
10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이영 센터장	역능
11	평택외국인복지센터	김우영 사무국장	역능

(2) 조사 방법

우리 조사의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 설문 조사(Survey research), 면접 조사(Interview) 및 현지 조사(Field work) 등이다. 전체적인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6)

〈표 6〉 조사 방법, 대상, 내용

조사 방법	내용	조사 지역 및 대상
설문 조사	외국인주민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사회통합의 정도를 파악	도내 외국인 집주지역 7개시 (안산,시흥, 화성,평택,김포,양주,포천) 거주 외국인 주민 560명
인터뷰 및 현지 조사	외국인주민과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인터페이스 공간 종사자들 및 기관에 대한 질적 조사	도내 11개 기관, 9명의 전문가
문헌 조사	사회통합 개념, 지표, 실태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사회통합 개념, 사회통합 지표체계, 사회통합 지표체계 구성요소

① 설문조사

이번 조사는 일곱 곳의 경기도의 외국인 집주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범주의 이주민이 아니라 모든 이주민 유형을 조사 대상으로 포괄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사들과는 구분된다. 설문지는 6개 영역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통합은 참여(participation), 관계(relationship), 역능성(social empowerment), 포용(inclusion)의 네 차원으로 범주화했다.

참여는 체류 국가의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갖는 관심 여부로 측정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법제상 외국인의 정치 참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책 대상조차도 “90일 이상의 합법적인 체류자”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계는 사회적 소통과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는 범주다. 사회적 소통과 신뢰의 정도는 공동체의 소속감과 유대감, 결속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역능성은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사회적 관계와 결합하여 발휘될 수 있는 정도, 곧 사회적 이동 가능성과 그에 동반되는 삶의 만족감 등을 측정하기 위한 범주이다. 포용은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접근이 가능한지, 다시 말해 어느 정도나 배제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범주이다. (표7)

〈표 7〉 설문문의 구성

범주	문항
전반적 사항	한국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편안한 공간, 차별요소, 정책의 공정성
참여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관심, 사적 모임, 공적 모임, 희망체류기간
관계	도움요청대상, 신뢰하는 대상, 매체이용, 이사 횟수
역능	동네소속감, 삶의 만족도, 탐방능력, 한국어향의능력
포용	존중감, 차별 공간, 거주지역 평가, 모국문화향유
개인 사항	성별, 연령, 사증, 체류기간, 거주지역, 경제활동지역, 고용여부, 수입, 동거, 혼인상태, 주거형태, 주거방식, 생활비, 학력, 종교

설문지는 13개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며, 도내 7곳의 외국인 밀집시군 포함 총 14개 시군, 17개국 출신의 외국인주민 560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조사가 진행되었다. (표8, 9)

〈표 8〉 국적별 응답자 분포 (명, %)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조선족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기타	계
86 (15.3)	78 (13.9)	72/42 (12.9)	47 (8.4)	43 (7.7)	41 (7.3)	35 (6.3)	27 (4.8)	131 (23.4)	560 (100)

※ 기타 9개국(우즈베키스탄, 몽골, 미얀마, 러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한국귀화자 등)

〈표 9〉 시군별 응답자 분포 (명, %)

안산시	시흥시	포천시	화성시	평택시	김포시	양주시	기타	무응답	계
115 (20.5)	57 (10.2)	60 (10.7)	86 (15.4)	63 (11.3)	46 (8.2)	40 (7.1)	85 (15.2)	8 (1.4)	560 (100)

※ 기타 7개(부천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안성시, 남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외국인주민의 특성상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한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최소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대상별 비교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당 표집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그에 맞추도록 노력하며 샘플링을 시도하였다. (표10)

〈표 10〉 샘플링 가이드라인 (명)

지역	유형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 취득자		미등록 외국인	합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등	기타	혼인 귀화자		
안산시		46	8	2	19	16	5	6	102
시흥시		47	7	1	17	13	5	4	94
포천시		60	6	3	8	6	4	1	88
화성시		44	4	2	9	5	3	1	68
평택시		33	4	4	9	5	3	2	60
김포시		35	4	1	7	5	3	2	57
양주시		29	4	1	6	4	3	1	48
합계		294	37	14	75	54	26	17	567

우리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설문 문항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등 몇 개 이주민 지원 단체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주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적 사항 중 연령을 묻는 문항의 보기를 기호로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국적을 묻는 문항의 보기 중 한국(귀화자)를 맨 앞 항목으로 배치하여 귀화자들이 출신국과 현재 국적을 혼동하여 표기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 응답자가 중복 표시할 개연성이 높은 문항에 대해서는 한 개의 답만 응답할 것을 별도로 적시하도록 안내 문구를 삽입하였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기만을 고르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자들의 의견에 따라 최초의 도움 요청자가 가장 신뢰 관계가 높은 대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 원래의 설문 문항대로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 해당하는 설문 조사는 메르스 여파로 애초 계획보다 두어달 미루어져, 7월~8월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설문은 아래 기관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애초에 기대한 목표보다 몇 십 부를 더 확보할 수 있었다. (표11)

〈표 11〉 설문조사 협력기관

연번	기관명
1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2	휴센터(안산)
3	지구인의 정류장(안산)
4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5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6	평택외국인복지센터
7	평택대다문화가족센터
8	김포시외국인주민복지센터
9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10	양주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7) t-test는 종속변수가 등간(interval)수준 이상이며 독립변수는 두 개 집단을 가리키는 것일 때 측정되며 독립변수의 두 개 집단이 종속변수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통계기법이다. 분산분석(ANOVA)은 마찬가지로 상황에서 셋 이상의 독립 변수 집단 사이에 종속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통계 기법이다.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두 등간수준 이상에서 이 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통계기법이며, 요인분석은 여러 독립변수들 사이에 잠재된 어떤 특성을 찾기 위한 것이고 그런 특성을 다시금 새로운 변수로 설정해서 이후의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활용된다.

설문 조사 결과는 t-test, 분산분석(ANOVA),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요인분석 등의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⁷⁾

② 전문가 인터뷰 및 사례(현지) 조사

설문 조사 결과를 기계적으로 계량화하거나 추상적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문가 인터뷰와 관련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지역적 형평성과 우리 연구진과의 관계성(rapport)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였다. 서울시의 다섯개 기관이 포함된 것은 미등록 아동 및 싱글맘 보호 시설 운영에 있어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현지 조사 대상 기관과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12)

〈표 12〉 현지 조사 대상 기관과 조사 내용

	기관명	조사 내용	조사 범주
1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결혼이주여성 직업멘토링 이중언어교육 미등록 아동 보호	역능, 포용
2	아시아인권문화연대(부천)	강남시장마을축제	참여
3	밀알어린이집(부천)	내외국인통합보육	포용
4	지구촌 어린이집(서울)	내외국인통합보육	역능, 포용
5	이주민방송MNTV(서울)	사법통역전문가 양성교육 키즈카페 겸 다문화 북카페	역능, 참여
6	지구촌 학교(서울)	대안초등학교	역능, 포용
7	지구촌 그룹홈(서울)	아동·청소년 보호	포용
8	이주여성지원센터(서울)	외국인미혼모 보호	포용
9	고려인 야학 너머(안산)	한국어교실, 방과후보육	역능, 포용
10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한국어교실	역능
11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예비사회적기업 지구별	역능

4) 기대효과, 활용 방안 및 추진 일정

(1) 기대효과, 활용 방안

이번 조사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는 외국인주민 전체를 포괄적인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최초의 지역사회통합 실태 조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당위론이나 목적론을 넘

어서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실태에 관련한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지 않고 이번 조사는 참여, 관계, 역능, 포용 등 사회통합의 여러 차원들 사이에 그리고 지역, 성, 출신국 등 개인적 속성들과 사회통합 요소들 사이의 관련 정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를 통해 사회통합의 촉진 요인과 장애 요인을 추출하고, 외국인주민 당사자 내부에서도 사회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욕구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혀볼 것이다.

사회통합의 재개념화에 근거한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우리는 지역친화적이며 실현가능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의 내용과 방식을 제안해볼 것이다. 우리의 조사 결과는 보고서,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공론화가 시도됨으로써 향후 보다 발전된 사회통합 정책 입안을 위한 기본적인 준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 일정

조사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표13)

〈표 13〉 조사 추진 일정

조사기간: 2015. 1 ~ 12													
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계획 수립 및 조사설계													
방문조사 및 인터뷰													
설문지개발 및 전문가 자문													
예비조사 및 설문지 보완													
설문조사													
설문결과분석													
토론회 개최 ⁸⁾													
보고서 작성 및 발간													

8) 조사 결과 공론화의 일환으로, “이주인권 지역 공동토론회 - 이주민 지역사회통합 현안과 인권 쟁점을 2015.11.13.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동으로 개최함.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

Ⅱ. 선행연구

1. 국내 연구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사회통합 개념에 대한 연구, 지표 개발과 관련된 연구, 사회통합지표에 근거해 사회통합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다양한 사회통합 지표들을 정리해놓은 연구로는 2012년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강신욱 2012), 2014년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이재열 외 2014) 등이 해당한다.

전자는 사회통합과 관련 다양한 학자들의 구체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지표체계를 정립해 놓았다. 그를 근거로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핵심지수, 측정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았으나 외국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후자는 사회통합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소개한 후 종합적 정의를 시도한다. 사회통합의 핵심적인 두 영역은 잠재적인 갈등 영역과 사회통합 역량으로 제시된다. 잠재적 갈등 영역은 경제자원 양극화(소득, 고용, 자산, 빈곤), 사회자원 양극화(사회적 거리, 이동, 이혼, 자살), 이념 양극화(신뢰, 관용, 가치관, 물질주의) 등 다차원적인 양극화로 구성된다. 사회통합 역량은 체계역량(복지제공역량, 회복탄력성), 생활세계역량(사회적 역능성, 정치적 역능성), 규범역량(공정성, 투명성)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초기 사회통합지표 개발과 관련된 연구로는 2008년 발간된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해당한다(설동훈·김명아 2008). 이 연구는 이민자를 8개 집단으로 분류했으며 이민자 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사회통합지표는 연속 변수로 규정되어 있다. 성취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국의 특수성을 지표 구성에 반영하겠다는 연구 취지가 돋보인다.

좀 더 세분화된 사회통합지표의 구성은 2011년 “남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연구”에서 시도된 바 있다(문유경·전기택 2011). 이 연구는 이민 상태별로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총 6개 통합 영역, 22개 세부영역, 99개 세부 항목으로 사회통합지표를 구성한 바 있다. 그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특성(연령, 성, 혼인상태, 교육정도) 별 내국인과 외국인 남녀 사회통합지수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정한 외국인 집단의 사회통합 실태를 분석한 대표적이 연구로는 2012년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정책 수요 분화에 대한 연구”(김이선 외 2012), “2012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중심으로”(정기선 외 2012) 등을 들 수 있다.

“여성 결혼 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정책 수요 분화에 대한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이동성, 가족관계의 변화와 돌봄 역할 확대, 경제적 수준, 사회적 관계망의 재구성, 서비스 이용 양상

의 전개 등을 통해 결혼 이민자의 사회통합 양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2012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중심으로”는 영주권자 및 귀화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태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개발된 일반적 사회통합지표들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그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입국 및 영주권. 국적취득 과정', '가족특성과 가족생활', '경제적 적응', '생활환경', '건강과 삶의 질', '사회통합'이라는 범주가 제시된다.

2013년에 발간된 “재한 외국인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측정”의 조사 대상은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제(H-2) 종사자들이다(전경옥 외 2013). 이 연구는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을 한국에 적용하여 정치영역, 경제영역, 사회문화영역, 보건 및 복지 영역, 주거 및 삶의 질 영역에서 이주노동자 사회통합의 정도와 양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사회통합 정책을 평가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내외국인 주민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 구축이 외국인 밀집지역 내에서 사회통합 정책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박세훈 2010), 이념 및 가치, 계층, 지역발전이라는 네 가지 사회통합 영역에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소정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편협성과 모호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개진된 바 있다(김미숙 외 2012). 한국 다문화 정책의 위험성을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분리 및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고립”으로 규정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도 존재한다(김영란 2013).

2. 국제 비교 및 해외 사례

국내 학자들의 사회통합 국제 비교 및 해외 사례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유럽과 미국,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사회통합 정책의 이론적 근거, 특징과 핵심 내용, 전달 체계, 한국 사회 적용가능성 등이 연구 주제로 채택된 바 있다.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한국 사회통합 정책 연구 : 중국과 싱가포르의 상호성 원리의 한국 사회 적용가능성”이라는 연구는 한국사회통합의 원리를 다문화주의가 아닌 ‘상호성의 원리’에서 찾으려 시도한다(최현실 2009). 상호성의 원칙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상호 존중과 공존으로 규정되며 중국과 싱가포르의 다민족 정책이 사례로 제시된다. 상호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다문화 가정 정책은 배타주의라는 한계를 노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소수인종 통합정책 탐색: 교육, 복지, 언어정책을 중심으로”는 미국의 소수 인종 통합

9) MIPEX(Migration Integration Policy Index)는 이주자 통합 정책 측정 지표로 8개 정책 영역, 167개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등 38개국에서 수집되고 있다. (<http://www.mipex.eu/> 2015.12. 방문)

정책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구체적인 정책 이슈가 제안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강휘원 2010). 소수 인종의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이슈에는 언어, 종교, 법적지위, 교육, 고용, 보건 및 복지, 주택, 인종편견 및 차별, 국가 정체성, 정치적 대표성과 자치 등의 이슈가 망라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주의에서 시민통합으로: 네덜란드 이민자 통합정책”은 유럽의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 속에서, 선도적으로 시민통합형 이민자 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설동훈·이병하 2013). 특히 결혼 이민자의 법적 지위, 정책추진체계, 정책내용 등 세 가지 범주를 소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민자를 보편적 정책 틀 속에 편입시키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문화시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방향에 대한 일고찰: 네덜란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는 네덜란드가 다문화주의적 통합정책에서 동화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한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정책 방향 선회의 배경, 연혁, 현 정책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 네덜란드 정책은 사회통합에 있어 ‘사회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네덜란드 내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정책’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이현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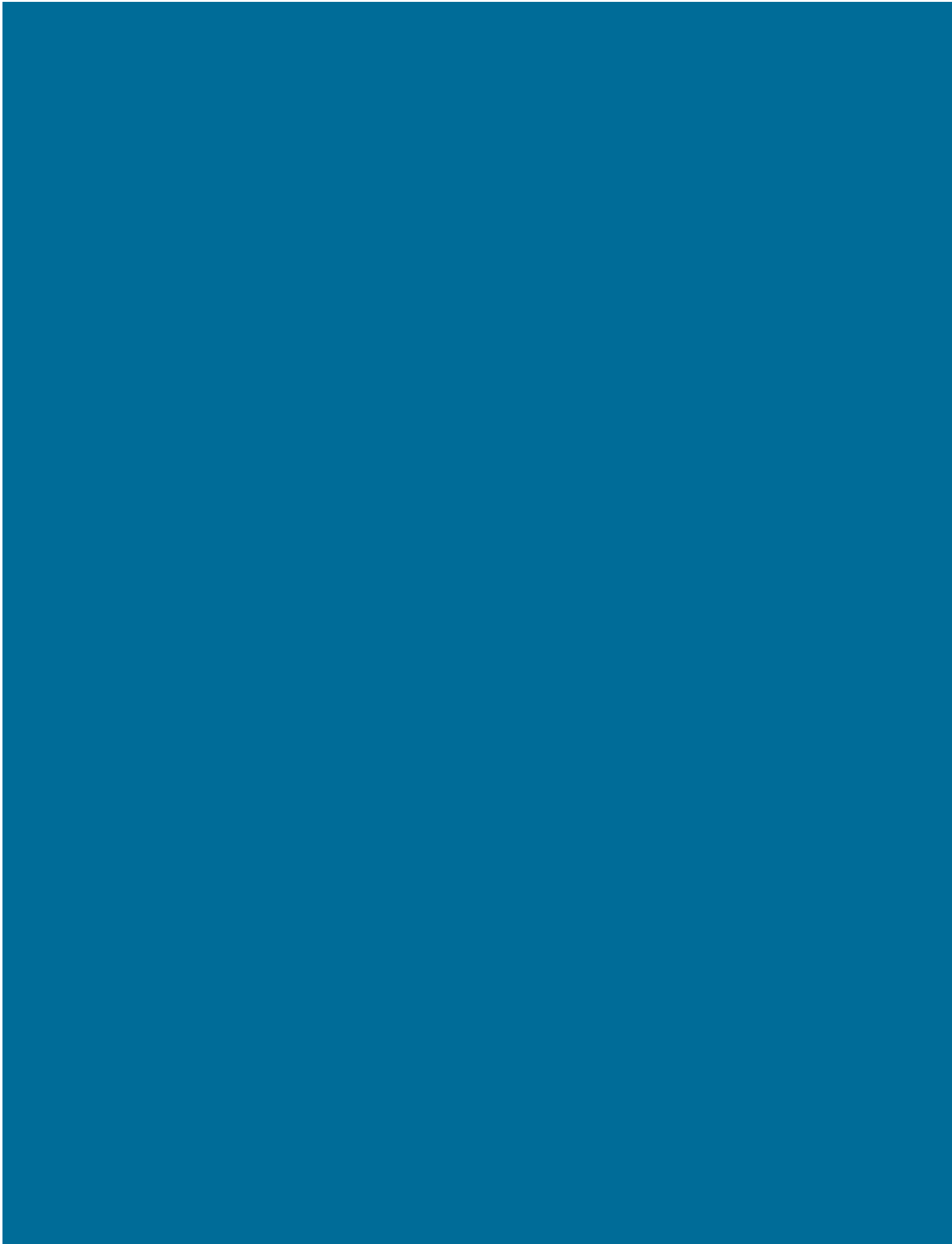
“국제결혼 이민자의 조기 사회통합증진 방안연구: 한국과 독일의 정책 및 사례를 중심으로”는 의정부 지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독일의 사례와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조용만·박성범 2013). 사회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실적합한 정책방향 설정과 시행,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적인 추진체계의 구축, 민·관·학 협력체계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다른 국가들의 사회통합 정책의 ‘추진 체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들도 존재한다. “독일 이주 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 거버넌스”는 2005년 제정된 독일 이민법의 채택 배경과 이민자 사회통합 거버넌스 구조 및 실행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강휘원·강성철 2010). 이민법 제정으로 사회통합 정책의 결정 권한은 주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이양된 반면 정책 집행에는 중앙(연방)정부, 주정부, 기초단체, 국제기구,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비교 연구: 국가 간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역시 호주, 영국, 독일 등 각 국가별 사회통합 정책 전달체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김준현·문병기 2014). 이들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민자 지원 및 사회통합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할 전담부처와 사회통합 서비스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 간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김준현·문병기 2014).

이들 국내외의 사회통합을 주제로 하는 선행 연구들과 우리 조사의 차별성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대상의 포괄성이다. 선행 연구들 대부분은 연구 대상을 특정한 외국인 집단(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영주권자 및 귀화자, 중도입국자녀 등)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 연구의 조사 대상에는 외국인주민 전체와 미등록 이주민이 포괄된다. 둘째 기존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2차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좀 더 현실감있는 실태 파악과 실현가능한 정책 모색을 위하여 직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셋째 구체적인 비교가능한 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 대상 지역을 경기도의 외국인 집주 지역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조사 대상에의 접근성 및 응답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주민들과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는 지원 단체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위적이며 목적론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을 넘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정책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

Ⅲ. 설문조사 결과

1. 사회통합 실태

1) 개인 사항

응답자들의 개인적인 정보로 이번 조사는 ‘성별, 연령, 사증, 체류기간, 거주지역, 경제활동지역, 고용여부, 수입, 동거 여부 및 대상, 혼인상태, 주거형태, 주거방식, 생활비, 학력, 종교’ 등을 물었다.

전체 560명의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성 381명(68%), 여성 168명(30%)이었다. 2015년 1월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의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성별 분포가 남성 53.9%, 여성 46.1%였다는 점에서 우리 조사의 성별 표집의 규모는 남성이 약간 과대 표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아마 이번 조사가 외국인 남성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원 기관들의 협조로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표 14>

<표 14> 성별 분포

	남자	여자	무응답	계
빈도(%)	381(68.0)	168(30.0)	11(2.0)	560(100)

<표 15> 연령대별 분포

연령대	빈도(%)
18세 ~ 20세	18(3.2)
21세 ~ 30세	269(48.0)
31세 ~ 40세	188(33.6)
41세 ~ 50세	52(9.3)
51세 ~ 60세	21(3.8)
61세 이상	4(0.7)
무응답	8(1.4)
계	560(560)

연령 분포는 21세에서 30세 사이가 전체 응답자의 48%로 가장 다수였다. 그 다음으로는 31세에서 40세 사이 33.6%, 41세에서 50세 사이 9.3%, 51세에서 60세 사이 3.8%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2%가량이 21세에서 40세 사이로 젊은 층으로 나타났다. 51세 이상의 상대적 고령층은 4.5%에 불과해 일부 외국인 집주지역에서 주자장되는 ‘외국인 주민의 고령화’ 가설이 이번 조사의 샘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15>

〈표 16〉 주거 지역

시군명	빈도(%)
안산시	115(20.5)
시흥시	57(10.2)
포천시	60(10.7)
화성시	86(15.4)
평택시	63(11.3)
김포시	46(8.2)
양주시	40(7.1)
기타 지역	85(15.2)
무응답	8(1.4)
계	560(100)

조사 대상 지역인 경기도내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7곳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규모는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포천시, 시흥시의 순이었다.〈표 16〉

〈표 17〉 응답자의 경제 활동 지역

시군명	빈도(%)
안산시	112(20.0)
시흥시	49(8.8)
포천시	59(10.5)
화성시	90(16.1)
평택시	57(10.2)
김포시	48(8.6)
양주시	40(7.1)
기타 지역	88(15.7)
무응답	17(3.0)
계	560(100)

경제 활동(취업, 사업)지역 응답자의 규모 분포 역시 거주 지역과 동일했다. 안산시, 화성시, 포천시, 평택시, 시흥시의 순이었다. 〈표 17〉

7곳의 조사 대상 지역에 덧붙여 ‘기타 지역’이 선택지에 포함된 것은 외국인주민이 실제 거주하거나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지역과 이용하는 지원 기관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경기남부지역의 안성시는 외국인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마땅한 지원 단체가 없기 때문에 안성지역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주로 평택에 위치한 지원센터를 이용한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에도 우리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의정부에 소재한 외국인력지원센터를 많은 노동자들이 이용한다.

‘기타 지역’을 선택지에 포함시킨 의도는 이처럼 외국인주민들은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를 찾아 이동하기도 한다는 것, 또한 거주 지역과 경제 활동 지역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기타 지역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주 생활 지역에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인천 등 비경기권 수도권 지역과 충청 지역 등 비경기권 비수도권 거주자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 대상자의 사증 형태는 등록 외국인이 전체의 83.8%로 압도적이었다. 미등록은 8.3%, 귀화자는 2.8%에 불과했다. 무응답은 9.6%에 달했는데, 경험적으로 무응답자의 대부분은 미등록 상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무응답을 미등록에 포함시키는 경우 조사 대상자 가운데 미등록은 17.9%에 달한다. 이는 조사 설계 당시 설정했던 미등록 샘플의 규모 50명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표 18>

<표 18> 사증 형태

항목	빈도(%)
등록	469(83.8)
미등록	21(3.8)
한국으로 귀화	16(2.8)
무응답	54(9.6)
계	560(100)

<표 19> 체류기간

기간	빈도(%)
12개월 이하	102(18.2)
13~24개월	115(20.5)
25~36개월	61(10.9)
37~48개월	85(15.2)
49~60개월	74(13.2)
61~72개월	16(2.9)
73~84개월	18(3.2)
85~96개월	26(4.6)
97~108개월	18(3.2)
109~120개월	15(2.7)
121개월 이상	25(4.5)
무응답	5(0.9)
계	560(100)

2015년 7월 현재 한국 거주 기간은 1년에서 2년 이하가 20.5%로 가장 많았고 1년 이하가 18.2%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3년에서 4년 이하 15.2%, 4년에서 5년 이하 13.2% 순이었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 등록 외국인이었다는 점에서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응답자의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수긍이 가는 결과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장기 체류자라고 할 수 있는 5년 이상 체류자의 전체 규모 역시 21.1%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10년 이상을 체류했다는 응답자 역시 4.5%에 달했다. <표 19>

〈표 20〉 고용 상태

항목	빈도 (%)
고용	417(74.5)
실업	80(14.3)
무응답	63(11.2)
계	560(100)

응답자의 74.5%는 현재 취업중이었으나 14.3%는 실업 상태였다. 무응답은 준실업 상태 혹은 비정규 고용 혹은 실업 상태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무응답을 실업 상태에 포함시키는 경우 실업 상태인 응답자의 규모는 25.5%로 증가한다. 이러한 우리의 추론이 맞다면 외국인주민 다수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다. 〈표 20〉

〈표 21〉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항목	빈도 (%)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36(45.0)
자녀양육 때문에	11(13.7)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0(0)
한국말이 서툴러서	9(11.2)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1(1.3)
외국인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5(6.3)
무응답	18(22.5)
계	80(100)

현재 실업 상태인 이유에는 원활하지 못한 구직 활동, 자녀양육, 한국어 문제, 외국인 차별 등이 선택되었다. 고용 허가제 하에서 근로하고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로 사업장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정보의 부족, 언어적 소통의 문제 등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는 재확인시켜준 셈이다(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4). 〈표 21〉

〈표 22〉 한달 수입 규모

항목	빈도 (%)
100만원 미만	61(14.6)
100만~200만원 미만	299(71.7)
200만~400만원 미만	47(11.3)
400만~600만원 미만	5(1.2)
600만원 이상	5(1.2)
계	417(100)

지난 달 총 수입은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 사이가 71.7%로 압도적이었으며, 1백만 원 미만 14.6%,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 사이가 11.3% 순이었다. 외국인주민 대다수가 매우 적은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참고로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인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3172만~4658만원으로 월 평균 264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뉴스1 2015.9.9.) 〈표 22〉

〈표 23〉 생활비 지출 항목

항목	빈도(%)
식료품비	238(42.5)
주거비	68(12.1)
자녀교육비	50(8.9)
여가생활	35(6.3)
통신비(전화,인터넷 등)	42(7.5)
관리비(가스,전기요금 등)	34(6.1)
무응답	93(16.6)
계	560(100)

생활비 항목 중 가장 큰 것은 식료품비로 42.5%였으며 그 다음은 주거비 12.1%, 자녀교육비 8.9%, 통신비 7.5%, 여가생활비 6.3% 순이었다. 무응답이 16.6%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아마 ‘송금’ 등 기타의 지출이 아닐까 추론된다. 〈표 23〉

〈표 24〉 혼인 여부

항목	빈도(%)
기혼	274(48.9)
미혼	241(43.0)
동거(사실혼)	33(5.9)
무응답	12(2.1)
계	560(100)

응답자의 혼인 여부 관련해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비율이 48.9%, 미혼자의 비율은 43.0%였다. 동거(사실혼) 중인 응답자 5.9%를 기혼자에 추가하면 기혼자와 미혼자의 규모의 차이는 조금 더 커진다. 〈표 24〉

〈표 25〉 동거자의 형태

항목	빈도(%)
가족	199(35.5)
친구	59(10.5)
직장동료	168(30.0)
혼자 산다	81(14.5)
기타	5(0.9)
무응답	48(8.6)
계	560(100)

동거인은 가족 35.5%, 직장동료 30.0%, 단독 거주 14.5%, 친구 10.5%의 순이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 조사 결과들과도 상응한다. 가족 동반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21.3%가 한국에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정기선 외 2013). 2014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등록외국인 중 49.3%가 가족과 동거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특히 재외동포나 방문취업 체류자의 경우는 60% 이상이 가족과 동거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표 25〉

〈표 26〉 동거 가족 유형

항목	빈도(%)
부모	32(16.1)
배우자(사실혼)	72(36.2)
자녀	16(8.0)
형제, 자매	8(4.0)
친척 등 기타 가족	19(9.5)
부모와 배우자	2(1.0)
부모와 자녀	1(0.5)
부모와 형제 자매	2(1.0)
배우자와 자녀	30(15.0)
부모, 배우자, 자녀	8(4.0)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1(0.5)
부모, 형제 자매, 친척	1(0.5)
무응답	7(3.5)
계	199(100)

동거하는 가족이 누군가를 묻는 질문에는 배우자라는 응답이 36.2%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15.0%로 그 다음이었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과 함께 사는 대가족도 4.0%에 달했다. 〈표 26〉

〈표 27〉 주거 형태

항목	빈도(%)
공장 내 기숙사	205(36.6)
컨테이너	75(13.4)
식당	4(0.7)
여관	10(1.8)
비닐하우스	5(0.9)
상가	1(0.2)
주택	63(11.3)
아파트	74(13.2)
원룸	77(13.8)
고시원	14(2.5)
기타	26(4.6)
무응답	6(1.0)
계	560(100)

주거 형태는 공장 내 기숙사가 36.6%로 가장 많았으며 원룸 13.8%, 컨테이너 13.4%, 아파트 13.2%, 주택 11.3%, 고시원 2.5%, 여관 1.8%의 순이었다.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등에 거주하는 비율도 1.8%에 달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 전형적인 주거 전용 시설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4.5%에 불과했다. 이는 이번 조사에 참가한 외국인주민의 전반적인 주거 형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 곧 주거의 질을 따지기 전에 전형적인 주거 시설에서의 거주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27〉

〈표 28〉 응답자의 주거 방식

항목	빈도(%)
자기집	59(10.5)
전세	42(7.5)
월세	173(30.9)
무료임차	259(46.3)
무응답	27(4.8)
계	560(100)

주거방식은 무료임차가 46.3%로 압도적이었으며 월세가 30.9%로 그 다음이었다. 그 다음으로 자기집 10.5%, 전세 7.5% 순이었다.〈표 28〉

출신국 학력은 고졸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년제 대학 17.9%, 중학교졸업 16.3%, 4년제 대학교 12.9%, 대학원 5.5% 순이었다. 종교분포는 불교 40.0%, 개신교 14.5%, 이슬람교 13.2%, 천주교 9.8%, 힌두교 4.1% 순이었으며 종교가 없다는 응답자도 13.0%에 달했다.

2) 전반적 사항

참여, 관계, 역능, 포용 등 이번 조사가 조작적으로 재정의한 사회통합의 네 가지 차원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한국 사회 전체의 외국인 사회통합의 여건 혹은 맥락에 대한 평가나 태도를 가늠해보기 위해 ‘전반적 사항’이라는 제하에 몇 가지 선행 질문을 던져 보았다. ‘한국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편안한 공간, 차별요소,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그 문항들이다.

〈표 29〉 한국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항목	빈도(%)
한국어	339(60.5)
이웃에 대한 신뢰	29(5.2)
이웃과의 교류	31(5.5)
모국문화 향유	15(2.7)
경제적 자립	108(19.3)
무응답	38(6.8)
계	560(100)

한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한국어가 60.5%로 압도적으로 선택되었다. 그 다음은 경제적 자립 19.3%, 이웃에 대한 신뢰 5.2% 등의 순이었다. 결국 언어와 경제라는 두 가지 요소가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되는 셈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모국 문화 향유는 2.7%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표 29〉

〈표 30〉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항목	빈도 (%)
직장/일터	72(12.9)
공동체 모임	67(12.0)
종교 시설	92(16.4)
마트 등 상업 시설	32(5.7)
공공 시설	78(13.9)
외국인 지원단체	179(32.0)
무응답	40(7.1)
계	560(100)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으로는 외국인 지원단체 32.0%, 종교 시설 16.4%, 공공 시설 13.9%, 직장/일터 12.9%, 공동체 모임 12.0% 등이었고 마트 등 상업시설은 5.7%에 그쳤다. 외국인 지원단체가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선택된 것은 아마 응답자 대부분이 이러한 기관의 이용자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 밖에 주목할 것은 공공시설이 (공동체 공간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편안한 공간으로 선택되었다는 점, 대부분의 외국인 차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알려진 작업장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생활 공간에 비해 훨씬 편안한 공간으로 선택되었다는 점 등이다. 〈표 30〉

한국 사회 생활에서 문제되는 요소들을 묻는 문항의 경우 약간 혹은 매우 큰 문제라는 응답을 더한 비율이 언어 74.3%, 경제력 46.8%, 인종 31.5%, 피부색 19.7%, 종교 16.6%, 출신국가 5.7%의 순이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인종과 피부색이 출신 국가라는 요소보다 훨씬 중요한 차별 요소로 선택되었다는 점이다. 〈표 31〉

〈표 31〉 한국 생활의 문제 요소들(빈도, %)

항목	매우 큰 문제이다	약간 문제이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종	43(7.7)	133(23.8)	152(27.1)	170(30.4)
피부색	33(5.9)	77(13.8)	140(25.0)	243(43.4)
언어	255(45.5)	161(28.8)	65(11.6)	39(7.0)
종교	20(3.6)	73(13.0)	166(29.6)	230(41.1)
출신국	29(5.2)	3(0.5)	159(28.4)	201(35.9)
경제력	87(15.5)	175(31.3)	133(23.8)	114(20.4)
성(SEX)	30(5.4)	65(11.6)	146(26.0)	254(45.4)

한국의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공정하다는 응답자가 70.0%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자 26.1%를 압도했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국의 외국인 관련 정책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제

사회나 국내 이주민 지원단체와는 구분되는 태도이다.¹⁰⁾ <표 32>

<표 32> 한국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	빈도 (%)
매우 공정하다	191 (34.1)
공정하다	201 (35.9)
공정하지 않다	109 (19.5)
매우 공정하지 않다	37 (6.6)
무응답	22 (3.9)
계	560 (100)

3) 참여

한국의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 정도도 약간 있다거나 혹은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해준 응답자가 전체의 72.2%로 관심이 별로 혹은 전혀 없다 라고 답한 응답자 26.9%를 압도했다. 이는 외국인주민들이 결코 ‘돈만 아는 경제적 도구’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존재임을 뜻한다. <표 33>

<표 33> 한국의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 정도

항목	빈도 (%)
매우 관심이 있다	160 (28.6)
약간 관심이 있다	244 (43.6)
별로 관심이 없다	95 (17.0)
전혀 관심이 없다	50 (8.9)
무응답	11 (1.9)
계	560 (100)

현재 참여하는 모임의 유형으로는 모국인 모임 73.4%, 직장동료 모임 64.1%, 가족이나 친척 모임 45.5%, 거주지 주민 모임 34.5% 순이었다. 경기도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국 출신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정기선 외 2012).

10) “예술흥행(E-6)비자 소지 이주민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직접 고용시 사업주, 파견 고용시 파견 사업주인 기획사 및 사용자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관계에서의 취약점, 이주민이라는 점에서 오는 정확한 정보의 부재,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취약점, 비자 발급 및 운영에 있어, 관리 감독의 허술함, 행정부처 간의 책임소재 불분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술흥행(E-6) 비자 발급 및 이주자의 유입 및 입국 후 근로환경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형태를 띠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4년 10개월 기간 동안 자발적인 사업장 이동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 국제 엠네스티는 고용허가제가 인신매매 형태를 띠고 있다고 비판”(한겨레21 1033호, 2014-10-23). “고용허가제 하에서 기간제한적이고 경직된 체류허가 및 비자 제도의 결과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자가 되고 있으며, 이들은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접근을 향유할 수 없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직된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자가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사보고서, 2012. 8. 31.)

우리 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직장동료 모임이 모국인 모임 다음으로 다수의 외국인주민이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점과 거주지 주민 모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동일 지역(혹은 국가) 출신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비롯한 다른 지역 출신자들이 연합으로 참가할 다지역 모임일 개연성이 높다. 후자의 경우는 일터가 아닌 생활세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이다.

거주지 모임 참여율이 34.5%에 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부족, 체류 자격의 한계,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일상 생활 공간에 대한 점점과 소속감을 갖기 어렵다고 알려진 외국인주민에게는 매우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최병두 2011). <표 34>

<표 34> 현재 참여하는 모임의 유형(중복응답; 빈도, %)

항목	있다	없다	무응답	합계
가족이나 친척 모임	255(45.5)	261(46.6)	44(7.9)	560(100)
직장동료 모임	359(64.1)	159(28.4)	42(7.5)	560(100)
모국인 모임	411(73.4)	118(21.1)	31(5.5)	560(100)
거주지 주민 모임	193(34.5)	305(54.5)	62(11.0)	560(100)

향후 참여 의사가 있는 모임의 유형은 지역자원봉사단, 지역스포츠클럽, 방법기동순찰대, 통반장활동의 순이었다. 지역자원봉사단과 지역스포츠 클럽이 사적 성격의 모임에 가깝고 통반장 활동이나 방법기동순찰대는 공적 성격의 모임에 가깝다는 점에서 외국인주민들이 공적 모임보다는 사적 모임에의 참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곧 공적 모임에의 참여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5>

<표 35> 향후 참여하고 싶은 모임의 유형(빈도, %)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통장, 반장 활동	243(43.4)	251(44.8)	66(11.8)	560(100)
방법기동순찰대	268(47.8)	229(40.9)	63(11.3)	560(100)
지역 자원봉사단	375(67.0)	135(24.1)	50(8.9)	560(100)
지역 스포츠 클럽	342(61.1)	163(29.1)	55(9.8)	560(100)

〈표 36〉 한국에서의 희망 체류 기간

기간	빈도(%)
1~3년	85(15.2)
4~6년	144(25.7)
7~9년	61(10.9)
10년 이상	88(15.7)
영주 거주	164(29.3)
무응답	18(3.2)
계	560(100)

한국에 체류하고 싶은 기간으로는 영주거주 29.3%, 4년에서 6년 25.7%, 10년 이상 15.7%, 1년에서 3년 15.2%, 7년에서 9년 10.9%의 순이었다. 희망 체류 기간으로 영주거주가 30%에 육박하게 나타난 것은 방문취업제 대상자들이 이번 조사에 다수 참여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의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과 모국에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면서 왕래 하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이민 형태를 추구하고 싶어”한다는 기존의 보고와는 상반되는 결과여서 주목을 요한다(정기선 외 2012). 〈표 36〉

4) 관계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택한 집단은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로 무려 55.4%의 선택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 내 가족 또는 친지 15.4%, 직장동료 8.6%, 한국 내 친구 또는 이웃 7.1%, 공무원 2.5%의 순이었다.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가 압도적인 일순위로 선택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설문에 참가한 외국인 주민 다수가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이용자들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 이외에 직장 동료, 한국내 친구 또 이웃 등도 도움 요청의 대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인주민의 사회 연결망으로 압축되는 사회적 자본의 범위가 한국인 집단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표 37〉

〈표 37〉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 요청 대상

항목	빈도(%)
한국 내 가족 또는 친지	86(15.4)
한국 내 친구 또는 이웃	40(7.1)
직장 동료	48(8.6)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	310(55.4)
공무원	14(2.5)
없다	11(1.9)
무응답	51(9.1)
계	560(100)

외국인주민의 사회 자본의 범위가 자국민을 넘어 한국인 집단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뢰하는 대상을 묻는 설문에서 의해서도 확인된다. 응답자들은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 공무원, 직장동료, 한국인 친구, 고용주, 이웃, 한국인을 제외한 친구의 순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인을 제외한 친구보다 한국인 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지원단체 관

계자를 제외하는 경우 공무원 및 직장 동료와 고용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38>

<표 38> 신뢰하는 대상 유형(빈도, %)

항 목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무응답	계
이웃	60(10.7)	294(52.5)	120(21.4)	41(7.3)	45(8.0)	560(99.9)
직장 동료	120(21.4)	301(53.8)	68(12.1)	27(4.8)	44(7.9)	560(100)
고용주	97(17.3)	255(45.5)	102(18.2)	51(9.1)	55(9.8)	560(99.9)
한국인 친구	78(13.9)	288(51.4)	90(16.1)	50(8.9)	54(9.6)	560(99.9)
한국인을 제외한 친구	40(7.1)	280(50.0)	127(22.7)	48(8.6)	65(11.6)	560(100)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	338(60.4)	177(31.6)	11(2.0)	8(1.4)	26(4.6)	560(100)
공무원	217(38.8)	229(40.9)	35(6.3)	32(5.7)	47(8.3)	560(100)

외국인주민이 체류국 사회에서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과 같은 장소적인 귀속성을 확보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외국인주민 대부분에게 이주 공간은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타자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타자의 공간’에서 “장소감이나 정체성”을 갖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최병두 2011). 더구나 한국의 외국인주민 다수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은 앞선 설문에서 확인한 바 있다.

외국인주민에게 장소적인 불안정감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 공간이 존재할까? 여기에 착안하여 우리는 설문에 매체 이용 문항을 포함시켰다. 우리의 예상처럼 외국인주민들은 매우 능동적인 매체 이용자들이라는 점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곧 소셜미디어로 무려 78.4%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곧 TV를 사용한다고 답해준 60.4%를 압도하는 규모다.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다고 답해준 응답자는 42.9%, 블로그나 개인홈페이지 이용자도 37.1%에 달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아날로그 매체를 이용한다고 답해준 36.4%보다 조금이나마 많았다.<표 39>

〈표 39〉 사용하는 매체의 종류(빈도, %)

항 목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인터넷 카페	240(42.9)	259(46.3)	61(10.8)	560(100)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208(37.1)	274(48.9)	78(14.0)	560(100)
트위터, 페이스북	439(78.4)	72(12.9)	49(8.7)	560(100)
TV시청	338(60.4)	171(30.5)	51(9.1)	560(100)
신문이나 잡지	204(36.4)	280(50)	76(13.6)	560(100)

〈표 40〉 한국에서 이사 횟수

항목	빈도(%)
1회	198(35.4)
2회	113(20.2)
3회	80(14.3)
4회	27(4.8)
5회	16(2.9)
6회 이상	15(2.6)
무응답	111(19.8)
계	560(100)

이사 횟수는 1회 미만이 35.4%로 가장 많았고 2회 20.2%, 3회 14.3, 4회 4.8%의 순이었다. 주거의 불안정성에 비해 이사 횟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외국인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를테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규율, 관리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이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과 같다.〈표 40〉

5) 역능성

일반적으로 외국인주민의 장소 귀소감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의 부족, 지리적 지식의 부족 등이 특정 장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약하기 때문이다(최병두 2011). 더구나 우리는 대부분의 외국인주민이 임시 거처나 무료 임차 등 매우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높은 소셜미디어 사용율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취약한 장소귀속성을 소셜미디어 공간에서의 사이버 정체성으로 보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표 41〉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

항목	빈도(%)
매우 있다	132(23.6)
약간 있다	259(46.3)
별로 없다	87(15.5)
전혀 없다	74(13.2)
무응답	8(1.4)
계	560(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에게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이 있는 것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을 묻은 문항을 도입하였다. 조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민의 동네 소속감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이 ‘약간 있다’고 답해준 응답자는 46.3%였고,

‘매우 있다’라고 답해준 응답자도 23.6%에 달해, 전체적으로 69.9%의 응답자는 동네 소속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1〉

한국의 언론이 재현하는 외국인주민의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를테면 언론은 외국인근로자를 “잠재적 범죄자, 사회분열 유발자, 하등한 존재, 공생의 존재, 동정의 대상, 건전한 노동자, 인권적(법적) 약자, 무관심 등 9개 틀(frame)로 보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김재일·정창화 2012).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불법 결혼중개업의 희생자, 빈곤, 소통불능의 부정적 존재, 남성중심의 가족문화에 순응하는 대상”으로 재현된다. (이연옥 외 2012)

〈표 42〉 현재 삶 만족도

항목	빈도(%)
매우 만족한다	154(27.5)
약간 만족한다	318(56.8)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67(12.0)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17(3.0)
무응답	4(0.7)
계	560(100)

이처럼 언론에서 재현되는 부정적이거나 동정의 대상으로서의 외국인주민의 이미지는 시민사회에 그대로 투영되기 마련이다. 이런 이미지를 수용하는 경우 외국인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기대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그러한 생각이 매우 그릇된 편견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주민은 삶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약간 만족

56.8%, 매우 만족 27.5%로 전체적으로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무려 84.3%에 달했다.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2.0%,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표 42〉

문제발생 시 한국어로 항의할 수 있는 능력 및 지역의 공공 및 상업 시설에 대한 단독탐방능력은 외국인주민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초기 이민자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대표적인 어려움 세 가지가 언어, 정보 부족, 고립감이라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한국어 항의 능력과 지역 시설 단독 탐방 능력을 갖춘 외국인주민은 초기 적응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주류 사회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준비 곤 지역사회통합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기여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 및 상업 시설의 단독 탐방 능력을 묻는 문항의 경우 대체로 매우 높은 탐방능력을 보여주었다. 백화점이나 시장 등 상업 시설 탐방 능력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91.8%에 달했으며, 문항 중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난 주민센터나 파출소 등 공공 기관의 탐방 능력 역시 70.9%에 달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2009년에 실시된 한 조사는 외국인근로자가 ‘대중교통의 노선’에 대해 49.1%, ‘시장 및 마트 등의 위치’ 등에 관해 45.7%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 기관 등 공공 시설의 위치에 대해서는 31.8%라는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인지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최병두 2011).

몇 년의 시간이 경과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조사에서 확인된 외국인주민의 공공 및 상업 시설 단독 탐방 능력은 매우 높은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가설들과 달리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표 43>

<표 43> 공공 및 상업시설 단독 탐방 능력(빈도, %)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	439(78.4)	101(18.0)	20(3.6)	560(100)
주민센터, 파출소,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	397(70.9)	132(23.6)	31(5.5)	560(100)
지하철역, 시외버스터미널	508(90.7)	34(6.1)	18(3.2)	560(100)
대형마트, 백화점, 시장 등 상업시설	514(91.8)	25(4.5)	21(3.7)	560(100)

문제나 오해가 생겼을 때, 한국어로 항의할 수 있는 능력의 경우 조금 그렇다 51.3%, 별로 그렇지 않다 25.3%, 전혀 그렇지 않다 2.5%, 매우 그렇다 12.3%의 순으로, 조금 혹은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63.6%를 차지했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33.9%였다. 지역 시설에의 단독 탐방 능력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28% 가량이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표 44>

〈표 44〉 문제나 오해 발생시 한국어 향의 능력 여부(빈도, %)

항 목	예
매우 그렇다	69(12.3)
조금 그렇다	287(51.3)
별로 그렇지 않다	147(26.3)
전혀 그렇지 않다	43(7.6)
무응답	14(2.5)
계	560(100)

6) 포용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는 정도를 묻는 문항의 응답지는 조금 그렇다 51.4%, 별로 그렇지 않다 21.3%, 매우 그렇다 19.8%, 전혀 그렇지 않다 6.4%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72.2%로 부정적인 응답 27.7%를 압도했다. ‘문제적인 존재’나 ‘시혜 혹은 두려움 대상’ 등 외국인 인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조사 결과도 매우 의외일 수 있을 것이다. 〈표 45〉

〈표 45〉 한국사회에서 존중받는 정도(빈도, %)

항 목	예
매우 그렇다	111(19.8)
조금 그렇다	288(51.4)
별로 그렇다	119(21.3)
전혀 그렇지 않다	36(6.4)
무응답	6(1.1)
계	560(100)

차별 공간과 관련 직장 및 일터, 거리나 동네, 공공기관, 상점 등 상업 시설, 외국인 지원단체의 순으로 차별이 경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앞선 문항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절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선택지들 가운데서에서는 최하위이긴 하지만 15.0%라는 무시 못할 규모의 응답자들이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해주었다는 점이다.

차별 경험에 관한 이번 조사 결과의 특징은 기존의 조사 결과보다는 차별 경험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러나 지원센터에서의 차별 경험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두 가지로 압축된다.¹¹⁾ 후자와 관련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다수가 지원단체 사용자들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가까

11) 의정부 지역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민자이기 때문에 차별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이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6%였다. 차별을 하는 한국인은 이웃 주민이 53%, 버스 및 택시 운전사가 14%, 학교 선생님이 12%이었고, 그 다음은 공무원 7%, 다문화지원단체 및 상담원 7%, 상점주인 5% 순이었다(조용만 2013; 의정부시 2013에서 재인용).

와져서 작은 불만을 차별로 간주'한 것인지, 외국인 지원센터의 업무나 활동 방식에 있어서 실제로 차별적인 요소와 관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표 46>

<표 46> 차별 공간(빈도, %)

항목	매우 심했다	약간 심했다	별로 심하지 않았다	전혀 심하지 않았다
거리나 동네	24(4.3)	124(22.1)	189(33.8)	191(34.1)
상점, 음식점, 은행 등	17(3.0)	84(15.0)	173(30.9)	248(44.3)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서 등)	20(3.6)	85(15.2)	168(30.0)	246(43.9)
직장/일터	73(13.0)	172(30.7)	165(29.5)	132(23.6)
외국인 지원단체	28(5.0)	56(10.0)	108(19.3)	328(58.6)

거주 지역에 대한 평가와 관련 일자리, 출신국 사람들의 규모, 생활환경, 주거비용, 외국인 지원단체, 외국인 관련 행정서비스, 자국어 사용 등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은 생활 환경과 외국인 행정 서비스 영역이다. 일자리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주거 비용은 모든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주거 환경의 열악함이 비용의 문제와 더불어 더욱 심각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자국어 사용 역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자국어 사용 환경에 대한 낮은 평가는 한국어 능력이 취약한 경우 언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배가될 수 있는 현실을 시사한다. <표 47>

<표 47> 거주 지역에 대한 평가(빈도, %)

항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일자리가 많다	170(30.4)	224(40.0)	96(17.1)	38(6.8)
출신국 사람들이 많다	170(30.4)	223(39.8)	110(19.6)	21(3.8)
생활환경이 편리하다	181(32.3)	242(43.2)	85(15.2)	21(3.8)
주거비용이 싸다	119(21.3)	183(32.7)	151(26.9)	65(11.6)
외국인 지원단체들이 많다	184(32.8)	187(33.4)	100(17.9)	42(7.5)
외국인 행정 서비스가 좋다	211(37.7)	199(35.5)	79(14.1)	31(5.5)
자국어를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다	149(26.6)	205(36.6)	88(15.7)	84(15.0)

12) 거주지역에 대한 평가 설문항은 2015 안산시외국인주민인권증진기본계획을 위한 실태 조사에서 차용하였다(안산시 2015). 경기도내 외국인 밀집 지역을 경제적 요인,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적 인프라시설(식당, 모국음식마트, 직업소개소, 비자수속소개소 등) 등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형성된 것으로 분석한 또 다른 연구도 참고하였다(정기선 외 2012).

모국 문화 향유에 대한 평가 역시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압도했다. 응답자들의 77.2%는 편하게 모국의 음악이나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답해주었다. 소셜미디어 사용율과 비슷한 수치라는 점에서 수긍이 가는 결과이다. 모국 음식 먹기나 모국 종교 생활 유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아마 이 두 가지는 사적인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아이템이라는 점이 응답율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에 반해 모국 전통의상 입고 외출하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58.9%로 모든 항목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공공의 생활 세계 공간에서 한국의 주류 사회가 특정한 커뮤니티의 특별한 드레스코드를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은 충분히 관대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모국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 활용 항목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기회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외국인주민의 일종의 ‘경력 및 역량 단절’은 그와 관련 재고해보아야 할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표 48>

<표 48> 모국 문화 향유에 대한 평가(빈도, %)

항목	매우 편하다	약간 편하다	별로 편하지 않다	전혀 편하지 않다
모국의 음악, 영화 즐기기	248(44.3)	184(32.9)	55(9.8)	43(7.7)
모국 전통의상 입고 외출	181(32.3)	149(26.6)	120(21.4)	66(11.8)
공공장소에서 모국어로 대화	202(36.1)	176(31.4)	108(19.3)	42(7.5)
모국 음식 먹기	261(46.6)	158(28.2)	90(16.1)	19(3.4)
모국 종교 생활 유지	249(44.5)	159(28.4)	78(13.9)	37(6.6)
모국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 활용	159(28.4)	186(33.2)	100(17.9)	70(12.5)

2. 분석

1) 요인 분석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이란 “질문 문항들, 변수들 혹은 측정 대상들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이들 측정치 사이에 공유하는 구조를 파악해 내는 통계 기법”을 의미한다. 요인 분석은 여러 개의 변인들을 몇 개의 공통된 집단으로 묶음으로써 자료의 복잡성을 줄이고 정보를 요약할 수 있게 해주며, 여러 개의 변인들을 동질적인 몇 개의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변인들 내에 존재하는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databaser.net).

우리는 한국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전반적 사항), 신뢰 대상 집단(관계), 차별을 경험한 공간(포용) 등 세 가지 문항에서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1) 한국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

‘전반적 사항’의 세 번째 문항은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것이었고,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출신국, 경제력, 성(sex) 등 7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이들 7가지 선택지에 대한 응답을 요인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유의미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인종/피부색’, 종교, 언어라는 요인들이다.<표 49>

<표 49> 한국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에 대한 요인 분석

항 목	인종 피부색	종교	언어
인종	0.745	0.264	0.149
피부색	0.653	0.382	
언어	0.135	0.139	0.978
종교	0.366	0.602	
출신국	0.538	0.553	
경제력	0.158	0.511	0.245
성(SEX)	0.248	0.491	

※ p=0.586

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인종/피부색’ 요인의 설명변량이 21.6%로 다른 요인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을 향한 인종주의의 위험성은 국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경

고하고 개선을 권고해온 주제이나, 한국의 공공 부문이나 주류 사회에게는 둔감하고 낮은 주제이다.¹³⁾

그런데 이번 조사는 이주민 당사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인종과 피부색이라는 문제를 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종교의 설명 변량은 20.1%, 언어의 설명 변량은 15.2%였다. 응답의 빈도에서는 언어가 압도적이었고, 두 번째로 경제력이 선택되었으나, 요인으로서의 경제력의 설명력은 매우 약했다. <표 50>

<표 50> 한국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요인들의 설명력

설명	요인	인종 피부색	종교	언어
설명변량		21.6%	20.1%	15.2%

(2) 신뢰대상 집단에 대한 요인 분석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네 가지 문항 가운데 두 번째는 “귀하는 다음의 사람들에게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이다. 이웃, 직장 동료, 고용주, 한국인 친구, 한국인을 제외한 친구,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일곱 가지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이들 7가지 선택지에 대한 응답을 요인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유의미한 요인이 분석되었다. 이웃/한국인 친구 요인,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 요인, 직장동료 요인이다. <표 51>

<표 51> 신뢰대상 집단에 대한 요인 분석

	이웃 / 한국인 친구	지원단체 관계자	직장동료
이웃	0.629		0.399
직장 동료	0.293	0.144	0.713
고용주	0.531	0.141	0.421
한국인 친구	0.811		0.179
한국인을 제외한 친구	0.582		0.312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		0.986	0.121
공무원	0.515	0.342	0.164

※ p=0.17

13) “한국 사회에 비시민을 향한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음에 주목한다. 한국 정부가 인종 우월주의적 사상을 유포하거나 외국인에 대하여 인종적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적발,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 “유엔특별보고관은 한국 사회에 관계 당국이 관심을 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미디어의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단체의 활동 등이 우려할 만한 사례들이다” (연합뉴스 2014-10-06).

주목할 점은 이웃과 한국인 친구 요인의 설명력이 무려 29.1%로 다른 두 가지 요인의 설명력을 압도했다는 점이다.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 요인의 설명변량은 16.3%, 직장 동료의 설명변량은 14.5%였다. <표 52>

<표 52> 신뢰 대상 요인들의 설명력

설명	요인	이웃 / 한국인 친구	지원단체 관계자	직장동료
설명변량		29.1%	16.3%	14.5%

(3) 차별 장소에 대한 요인 분석

외국인주민의 포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설문 문항 18번은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습니까?”라는 내용이었다. 선택지로는 거리나 동네, 상점/음식점/은행 등,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서 등), 직장/일터, 외국인 지원단체 등의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다.

<표 53> 차별 장소에 대한 요인 분석

	거리, 상점, 공공기관 요인	외국인 지원단체 요인
거리나 동네	0.649	0.379
상점, 음식점, 은행 등	0.795	0.412
공공기관 (주민센터, 경찰서 등)	0.603	0.496
직장/일터	0.311	0.455
외국인 지원단체	0.333	0.623

※ p=0.478

이들 다섯 가지 선택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요인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리상점공공기관 요인과 외국인 지원단체 요인이다. <표 53>

두 가지 요인의 설명력은 거리상점공공기관 요인이 32.5%, 외국인 지원단체 요인인 23.7%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흔히 외국인주민들이 가장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알려진 직장/일터가 요인으로서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지원단체 내에서의 차별이 설명력을 가질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54>

<표 54> 차별 장소 요인들의 설명력

설명	요인	거리, 상점, 공공기관	외국인 지원단체
설명변량		32.5%	23.7%

※ p=0.478

2) 상관관계 분석

(1) 성별 차이

성별 ‘인종/피부색’ 문제를 경험한 정도에 대한 t-test ($t=2.5362, p=0.01<0.05$) 검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인종/피부색’ 차별을 더 큰 문제로 여기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이주 여성이 이주 남성에 비해 인종 피부색과 관련한 차별경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거나 관련 경험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현재 모임 참여도에 관한 t-test ($t=2.511, p=0.01<0.05$) 검증 결과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도가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만 향후 모임 참여 의사에 있어서는 t-test($t=-2.549, p=0.01<0.05$) 검증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의사가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현재 참여 모임의 선택지는 가족이나 친척 모임, 직장동료 모임, 모국인 모임, 거주지 주민 모임 등 사적인 성격이 다소 강하고, 향후 참여 의향이 있는 모임의 선택지는 통반장 활동, 방법기동순찰대, 지역 자원봉사단, 지역 스포츠 클럽 활동 등 공적인 성격이 다소 강하게 구성했다는 점에서 이 분석 결과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사적 모임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반면에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공적인 지역 활동 참여 의사를 상대적으로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5>

<표 55> 인종피부색 차별 요인, 참여모임 및 희망 모임에 대한 성별 t-test 검증 결과

항목	여성응답자 평균	남성응답자 평균
‘인종/피부색’ 차별 요인	5.815603	6.244713
현재 참여 모임	5.493243	5.802432
향후 모임 참여 의사	5.849315	5.489164

(2) 연령별 차이

빈도에 따라 연령집단을 18세~30세, 31세~40세, 41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재범주화한 후 연령집단별 가족 및 친척 모임 참여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F=4.176, p=0.02<0.05$) 분석 결과 41세 이상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모임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표 56> 연령별 모임 참여도 차이에 대한 분산 분석

연령	모임참여에 대한 연령별 차이	p
41세 이상 (-) 18세~30세	-0.49	0.02
41세 이상 (-) 31세~40세	-0.49	0.02

연령집단별 향후 지역 활동 참여 의향과 관련한 분석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모임참여도와 상반되게 41세 이상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향후 지역 활동 참여의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4.418, p=0.02<0.05) <표 57>

<표 57> 연령별 향후 지역 모임 참여 의향의 차이에 대한 분산 분석

연령	향후 모임 참여 의사에 관한 연령별 차이	p
41세 이상 (-) 18세~30세	0.53	0.03
41세 이상 (-) 31세~40세	0.64	0.01

(3) 사증의 차이

사증의 유형(등록, 미등록, 귀화)에 따른 ‘인종/피부색’ 문제 인식, 지역의 공공 기관 및 상업 시설 단독탐방능력 간의 관계를 분산 분석한 결과 귀화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인종/피부색’ 문제를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7.911, p=0.00<0.05) <표 58>

<표 58> 사증 유형별 인종/피부색 문제 인식 정도의 차이

사증유형	사증 유형별 인종/피부색 문제 인식의 차이값	p
귀화 집단 (-) 등록 집단	-1.84	0.00
귀화 집단 (-) 미등록 집단	-2.22	0.00

단독탐방능력의 경우는 미등록 집단이 등록 집단이나 귀화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195, p=0.00<0.05)<표 59>

<표 59> 사증 유형별 단독탐방능력의 차이

사증유형	사증유형별 단독탐방능력 차이값	p
미등록 집단 (-) 등록 집단	0.66	0.00
귀화 집단 (-) 미등록 집단	-1.19	0.00

(4) 지역별 차이

응답자의 주거 지역별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 참여하는 모임, 향후 참여의사가 있는 모임, 이웃과 한국인 친구 신뢰 정도, 거주지역에 대한 평가, 모국문화 향유 정도에 대한 차이를 탐색해보기 위해 교차표 검증과 분산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교차표(카이제곱) 검증 결과 대부분 지역의 응답자들이 외국인 지원단체를 편안한 공간으로 선호하는 데 반해 시흥시 거주자들은 직장 및 일터, 양주시 거주자들은 종교 공간을 편안한 장소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마 양주시 응답자들 다수가 외국인 교회 출석자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chi^2=65.85, p=0.00<0.05$) <표 60>

<표 60> 거주 지역과 편안한 공간의 교차표(카이제곱) 검증결과($\chi^2=65.85, p=0.00<0.05$)

거주지역	편한장소					
	직장/일터	공동체	종교	마트	공공	외국인지원
안산시	17	11	21	10	7	36
시흥시	12	10	7	3	6	11
포천시	9	7	8	4	6	13
화성시	8	13	11	5	7	42
평택시	2	9	3	5	17	19
김포시	5	2	7	2	10	19
양주시	4	5	11	0	8	10
기타	15	9	19	3	13	24

거주지역과 참여하는 모임 간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택시 거주자가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거주자보다 모임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3.55, p=0.00<0.01$) <표 61>

<표 61> 거주지역별 현재 모임 참여 정도의 차이

거주지역	참여하는 모임의 거주 지역별 차이	p
평택시 (-) 안산시	0.79	0.004
평택시 (-) 시흥시	0.77	0.046
평택시 (-) 화성시	0.66	0.043

거주 지역별 향후 지역 활동 참여 의향 간의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화성시 거주자는 안산시 거주자나 기타 지역 거주자보다 향후 지역사회 모임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66, p=0.00<0.05) <표 62>

<표 62> 거주지역별 향후 지역 모임 참여 의사의 차이

거주지역	향후 지역 모임 참여 의사의 지역별 차이	p
화성시 (-) 안산시	-0.72	0.02
기타 (-) 화성시	0.85	0.00

거주 지역별 ‘이웃/한국인 친구’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기타 지역 거주자는 화성시나 평택시 거주자보다 ‘이웃/한국인 친구’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2.64, p=0.01<0.05) <표 63>

<표 63> 거주지역별 이웃/한국인 친구에 대한 신뢰 정도의 차이

생활지역	집단별 차이	p
기타 지역 (-) 화성시	0.70	0.03
기타 지역 (-) 평택시	0.93	0.00

지역별 거주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포천시/양주시 거주자들이 안산시/시흥시 지역 거주자에 비해 거주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임이 확인되었다.(F=2.703, p=0.03<0.05) <표 64>

<표 64> 지역별 거주지 평가에 대한 차이

거주 지역	지역별 거주지 평가의 차이	p
포천시/양주시 (-) 안산시/시흥시	1.61	0.04

거주지별 모국문화 향유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기타 지역 거주자들이 포천시/양주시 거주자에 비해 모국문화 향유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114, p=0.02<0.05) <표 65>

<표 65> 지역별 모국 문화 향유에 대한 평가

거주 지역	지역별 모국 문화 향유에 대한 평가	p
기타 (-) 포천시/양주	2.15	0.02

거주 지역과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 평가 간의 교차표(카이제곱) 검증결과 안산시, 시흥시, 화성 시에서는 ‘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포천시, 평택시, 김포시, 양주시, 기타 지역에 서는 ‘조금 공정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35.77$, $p=0.02<0.05$) <표 66>

<표 66> 지역과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 간의 교차표 검증 결과

생활지역	외국인정책 공정성			
	매우	조금	별로	전혀
안산시	42	33	24	12
시흥시	25	13	8	3
포천시	19	22	9	6
화성시	41	26	17	5
평택시	14	25	9	7
김포시	15	18	8	1
양주시	10	15	12	0
기타	21	40	19	3

3) 사회통합 영역들 사이의 관계

우리는 관계, 참여, 역능, 포용 등 사회통합의 범위와 정도, 상태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네 가지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촉진 요인 및 제약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1) 매체이용율과 다른 요소와의 상관관계

외국인주민이 이용하는 매체의 유형에 대한 조사는 우리 연구진이 사회통합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파악한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응답의 빈도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의 적극적인 사용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체이용과 다른 변수들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추가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이용매체 유형과 신뢰대상 집단(관계-관계), 생활시 문제요소(관계-일반), 정책의 공정성(관계-일반), 참여모임(관계-참여), 한국어 향의 능력(역능-관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다.

미디어 이용을 독립 변수로 ‘이웃/한국인 친구’ 신뢰 요인을 종속 변수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이웃/한국인 친구’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7>

〈표 67〉 매체 이용과 이웃/한국인 친구 신뢰 요인 사이의 회귀 분석 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Intercept)	3.71624	0.33702	11.027	<2e-16
11번문항(이용매체유형) 총합	0.10218	0.04595	2.224	0.0267

Adjusted R-squared: 0.00869
 F: 4.945 (p: 0.02667)

미디어 이용과 현재 모임 참여 정도 간의 관계를 회귀 분석한 결과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각종 모임 참여에 적극적임이 확인되었다. 〈표 68〉

〈표 68〉 매체 이용과 현재 모임 참여 간 회귀 분석 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Intercept)	4.93797	0.31098	15.879	<2e-16
11번문항(이용매체유형) 총합	0.10496	0.04237	2.478	0.0136

Adjusted R-squared: 0.01152
 F: 6.138 (p: 0.0136)

미디어 이용과 향후 모임 참여 의사간의 관계를 회귀 분석한 결과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향후 지역 모임 참여 의사 역시 능동적임이 확인되었다.〈표 69〉

〈표 69〉 매체 이용과 현재 모임 참여 간 회귀 분석 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Intercept)	3.89008	0.35261	11.032	<2e-16 ***
11번문항(이용매체유형) 총합	0.23805	0.04808	4.951	1.06e-06 ***

Adjusted R-squared: 0.05084
 F: 24.51 (p: 1.056e-06)

미디어 이용과 인종/피부색 문제 인식 사이의 관계를 회귀 분석한 결과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인종/피부색 요인이 한국 사회 생활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0〉

〈표 70〉 매체 이용과 인종/피부색 문제 인식 사이의 회귀 분석 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Intercept)	4.45068	0.43791	10.163	<2e-16 ***
11번문항(이용매체유형) 총합	0.22610	0.05999	3.769	0.000187 ***

F: 14.21 (p: 0.000187)
Adjusted R-squared: 0.03007

외국인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독립변수로 매체 이용을 종속 변수로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정책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집단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세 집단들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자의 집단은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매체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0.01, p=0.00<0.001) 〈표 71〉

〈표 71〉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와 매체 이용 사이의 분산 분석 결과

정책의 공정성	매체이용의 집단별 차이	p
매우불공정 (-) 매우공정	-1.37	0.00
매우불공정 (-) 조금공정	-1.28	0.00
매우불공정 (-) 조금불공정	-0.94	0.01

한국어 향의 능력을 독립변수로 이용매체 유형을 종속 변수로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향의 능력이 ‘조금 불가능’한 집단이 ‘매우 가능’한 집단 및 ‘전혀 불가능’한 집단에 비해서 매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5.227, p=0.00<0.01)〈표 72〉

〈표 72〉 한국어 향의 능력과 매체이용률 사이의 분산 분석 결과

한국어 향의능력	매체 이용 집단별 차이	p
조금불가능 (-) 매우가능	0.71	0.01
전혀불가능 (-) 조금불가능	-0.77	0.02

(2)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 평가(일반)와 다른 요소와의 상관 관계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독립변수로 한국 생활에서 인종/피부색 문제 인식 정도를 종속 변수로 분산분석(일반-일반)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매우 공정’하다고 느끼는 집단과 ‘매우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집단 사이에서 인종/피부색 문제 인식의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집단이 ‘매우 공정’하다고 느끼는 집단

에 비해 인종/피부색 관련 문제를 더욱 민감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18.36, p=0.00<0.05) <표 73>

<표 73> 정책의 공정성 평가와 인종/피부색 문제 인식의 정도

외국인정책 공정성에 대한 집단 비교	인종피부색 차별요인에 대한 집단별 차이	p
조금공정 (-) 매우공정	-0.82	0.00
조금불공정 (-) 매우공정	-0.84	0.00
매우불공정 (-) 매우공정	-2.17	0.00
매우불공정 (-) 조금공정	-1.35	0.00
매우불공정 (-) 조금불공정	-1.33	0.00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는 주요 공간에 대한 차별 정도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반-포용). 두 변수 사이의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집단이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집단에 비해 거리/상점/공공기관에서 차별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F=4.028, p=0.00<0.05) <표 74>

<표 74>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 평가와 주요 공간에서의 차별 체감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	주요공간차별정도에 대한집단별 차이	p
매우불공정 (-) 매우공정	-1.35	0.00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는 모국문화 향유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총합을 독립변수로 후자의 총합을 종속 변수로 두 변인 간의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 정책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모국문화 향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14.59, p=0.00<0.01) <표 75>

<표 75>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 평가와 모국 문화 향유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	모국 문화향유에 대한 집단별 차이	p
조금공정 (-) 매우공정	1.90	0.00
조금불공정 (-) 매우공정	1.70	0.01
매우불공정 (-) 매우공정	4.93	0.00
매우불공정 (-) 조금공정	3.03	0.00
매우불공정 (-) 조금불공정	3.23	0.00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독립 변수로 거주지역 평가의 총합을 종속 변수로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정책이 ‘매우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집단이 ‘조금 공정’하다고 평가하거나 ‘별로 공정 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집단에 비해 거주 지역의 일자리 상황 등을 만족스럽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9.661, p=0.00<0.01)<표 76>

<표 76>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 평가와 거주지역 평가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	거주지역평가에 대한집단별 차이	p
조금공정 (-) 매우공정	2.02	0.00
조금불공정 (-) 매우공정	2.28	0.00

(3) 삶의 만족도(역능)와 다른 요소와의 상관 관계

현재의 삶의 만족도를 독립 변수로 인종/피부색 요소를 생활시 문제로 여기는 정도를 종속 변수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삶에 ‘매우 만족’하는 집단이 ‘약간 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종 및 피부색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집단들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9.661, p=0.00<0.01) <표 77>

<표 77> 현재 삶 만족도와 인종/피부색 요소에 대한 문제의식

현재 삶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따른 인종/피부색 요소에 대한 집단별 차이	p
약간만족 (-) 매우만족	-0.55	0.01

(4) 존중감(포용)과 다른 요소와의 상관관계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느낌을 독립 변수로 거주 지역의 생활 환경에 대한 평가를 종속 변수로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덜 존중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거주지역에 대한 평가(일자리 등등)가 나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매우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거주 지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F=15.9, p=0.00<0.01) <표 78>

<표 78> 존중받는 정도와 거주지역 평가

존중감	거주지역 평가에 대한 집단별 차이	p
조금 존중받음 (-) 매우 존중받음	2.49	0.00
별로 존중 못받음 (-) 매우 존중 받음	3.35	0.00
전혀 존중 못받음 (-) 별로 존중 못받음	4.27	0.00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느낌을 독립 변수로 모국 문화 향유에 대한 평가를 종속 변수로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혀 존중 받지 못한다’라고 평가한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존중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모국 문화 향유가 불편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F=10.71, p=0.00<0.01$) <표 79>

<표 79> 존중받는 정도와 모국 문화 향유에 대한 평가

존중감	모국문화 향유에 대한 집단별 차이	p
조금 존중받음 (-) 매우 존중받음	1.80	0.00
별로 존중 못받음 (-) 매우 존중받음	3.38	0.00
별로 존중 못받음 (-) 조금 존중 받음	1.56	0.00

(5) 동네 소속감(역능)과 다른 요소와의 상관관계

현재 주거하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을 독립 변수로 공공 및 생활 시설 단독 탐방 능력을 종속 변수로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네 소속감이 큰 집단이 상대적으로 동네 소속감이 약한 집단에 비해 단독 탐방 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F=6.445, p=0.00<0.05$) <표 80>

<표 80> 사는 동네 소속감과 단독 탐방 능력

사는 동네의 소속감	단독탐방능력에 대한 집단별 차이	p
별로 없음 (-) 매우 큼	0.45	0.00
전혀 없음 (-) 매우 큼	0.50	0.00
별로 없음 (-) 조금 있음	0.31	0.04
전혀 없음 (-) 조금 있음	0.36	0.03

<표 81> 한국어 향의 능력과 단독 탐방 능력

한국어 향의 능력	단독탐방능력에 대한 집단별 차이	p
별로 없음 (-) 매우 큼	0.65	0.00
전혀 없음 (-) 매우 큼	0.98	0.00
별로 없음 (-) 조금 있음	0.50	0.00
전혀 없음 (-) 조금 있음	0.83	0.00

한국어 향의 능력을 독립 변수로 공공 및 생활 편의 시설 단독 탐방 능력을 종속 변수로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한국어 향의 능력이 큰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단독 탐방 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F=19.38, p=0.00<0.01$) <표 81>

(6)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과 다른 요소와의 상관관계(참여와 역능)

한국의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을 독립 변수로 모국 문화 향유의 총합을 종속 변수로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정치 사회 현안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과 나머지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매우 관심’이라고 답한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모국 문화를 좀 더 편안하게 향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F=5.377, p=0.00<0.01) <표 82>

<표 82> 한국의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과 모국 문화 향유

한국의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관심	모국 문화 향유에 대한 집단별 차이	p
조금 관심 (-) 매우 관심	1.32	0.03
별로 관심 없음 (-) 매우 관심	2.14	0.00
전혀 관심 없음 (-) 매우 관심	1.96	0.03

(7) 포용과 참여 요소들 사이의 다중회귀 분석

거리상점공공기관차별감, 거주지역평가, 모국문화 향유의 총합(독립변수)과 이용매체유형총합(종속변수)을 다중회귀분석 검증한 결과 거리상점공공기관차별감과 미디어사용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거주 지역의 생활 환경(일자리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국 문화 향유가 편안하다고 생각할수록 대중 매체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표 83> 거리상점공공기관차별감, 거주지역평가, 모국문화 향유와 이용매체유형 간의 다중회귀 분석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Intercept)	6.54740	0.38173	17.152	< 2e-16 ***(p<0.001)
거리상점공공기관차별감	0.04448	0.03006	1.480	0.14
거주지역평가	0.08209	0.03006	4.686	3.82e-06 ***(p<0.001)
모국문화향유	-0.08211	0.01620	-5.068	6.15e-07 ***(p<0.001)

Adjusted R-squared: 0.08678

F: 13.86, p: 1.28e-08

3. 요약과 시사점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비교적 젊고, 4년 이하의 단기, 남성, 등록 이주민이 주류였다. 그들의 월수입은 대체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였으며 수입의 대부분은 식료품 및 주거비에 지출되었고, 주거는 매우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가운데 35.5%가 가족과 동거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동거하는 가족은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희망체류 기간 역시 상대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사회통합의 네 가지 차원 곧 참여, 관계, 역능, 포용 등의 영역에서 응답자의 선택지는 대체로 그리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긍정적이었다. 한국의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사적이나 공적 모임 참여도(에 대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나)도 높은 편이었다. 매체 이용은 매우 활발했으며, ‘이웃과 한국인 친구’가 신뢰 대상 요인 가운데 가장 설명량이 큰 것으로 분석될 정도로 한국인 근린들과의 신뢰 관계 역시 돈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네소속감, 삶의 만족도, 단독탐방능력, 한국어능력 등 역능을 지표화하는 문항에 대한 응답도 기존의 조사나 ‘믿음’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존중받는다느 느낌 역시 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독립변수 사이의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 관계, 역능, 포용 등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네 가지 영역들 사이에는 대체로 정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문제 관련해서는 인종/피부색 요인이, 신뢰 대상 집단 관련해서는 이웃/한국인 친구 요인이 차별 장소와 관련해서는 거리상점공공기관과 외국인 지원단체 라는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종속 변수와 관련된 독립 변수를 사이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인종/피부색 문제에 더 민감하며 모임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모임 참여 의사는 남성들이 높았다. 41세 이상 집단이 그 이하 연령대 집단에 비해 모임 참여도가 높았으나 향후 모임 참여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 집단이 등록 및 미등록 집단에 비해 인종/피부색 문제를 더 느끼고 있었으며 미등록 집단이 등록 집단 및 귀화 집단에 비해 지역 시설 단독 탐방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 7곳의 지역 사이에서도 몇 가지 유의미한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지역의 응답자가 외국인 지원단체를 편안한 공간으로 선호하는 데 반해 시흥시 거주자들은 직장 및 일터, 양주시 거주자들은 종교 공간을 편안한 장소로 인지하고 있었다. 기타 지역 거주자는 화성시나 평택시 거주자보다 ‘이웃/한국인 친구’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양주시 지역 거

주자들이 안산시/시흥시 지역 거주자에 비해 거주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임이 확인되었다. 기타 지역 거주자가 포천시/양주시 거주자에 비해 모국문화 향유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이웃/한국인 친구’를 더 신뢰하며 각종 모임 참여에 적극적이고 향후 지역 모임 참여 의사 역시 능동적임이 확인되었다.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인종/피부색 요인이 한국 사회 생활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매우 공정’하다고 느끼는 집단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집단에 비해 인종/피부색 관련 문제를 더욱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거리/상점/공공기관에서 차별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전자는 다른 집단 보다 지역 상황 및 모국 문화 향유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이었다. 그에 반해 외국인 정책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집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집단들에 비해 매체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집단은 인종 및 피부색에 문제 의식이 약했으며, 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거주 지역 및 모국 문화 향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동네 소속감 및 한국어 향의 능력이 큰 집단이 단독 탐방 능력 역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정치 사회 현안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모국 문화를 좀 더 편안하게 향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거주 지역의 생활 환경(일자리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국 문화 향유가 편안하다고 생각할수록 대중 매체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와 그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우리는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실태와 촉진 및 제약 요인 그리고 향후 사회통합 활성화와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개선의 방향성과 방안에 대해 몇 가지 통찰력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주민의 실질적인 사회통합 자체가 매우 진전되어 있다는 점이였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사회통합이라는 입구에 도달해 있는 이 시점에 외국인주민의 ‘비제도적인 사회통합’은 현실적으로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중인 셈이다. 만약 이러한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면 사회통합을 키워드로 하는 정책 변화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사회통합으로의 정책 변화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시사점이 함의되어 있다. 우선 ‘이주민’ 혹은 ‘외국인주민’ 등의 용어에서 연상되는 것과 같과는 다르게 실제 그들 내부에는 다양한 욕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차이에는 성별, 연령별, 비자 유형별, 그리고 거주 지역의 차이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그들 욕구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가설과는 달리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고 존중감이나 장소귀속감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자기 역량이나 지역에 대한 평가 역시도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모국문화 향유가 선택된 빈도는 매우 낮았다.

사회통합 촉진 및 장애 요인 관련해서는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와 매체 사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효과적인 사회통합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정책 수요자들의 동의와 지지 기반 확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외국인주민 소셜 미디어 유저들을 정책의 키플레이어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외국인주민의 비제도적인 사회통합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며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높게 나타난 상황에서 ‘인종/피부색’이라는 차별 요인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이번 조사 결과는 특히 주목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의 인권 침해의 핵심은 ‘인종주의’로 압축된다.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의 위협에 대한 경고는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인종/피부색’ 차별 요인과 관련 이번 조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생활세계와 미디어 공간이다.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택지에서 ‘마트 등 상업 시설’은 5.7%로 최하위에 그쳤다.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

IV. 인터뷰 및 사례 조사 결과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의 핵심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자국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정치적·사회적으로 지역사회 의사결정 및 공론장에 참여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의 여부와 직결된다. 현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이 비판 받는 주요인은 외국인주민을 사회 활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정치사회적 참여의 폭을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사회통합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이 ‘대상화’되고 그들의 활동 영역이 제한된다면 법제의 테두리 외부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외국인주민들은 정책의 지평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통합 정책의 전면적인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속할 개연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현장의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을까. 우리는 현지 조사를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방문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9명의 활동가들과는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표 84>

<표 84> 현지 조사 대상 기관과 인터뷰 대상자

	기관명	조사내용	조사범주
1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결혼이주여성 직업멘토링 이중언어교육 미등록 아동 방과후 보육	역능, 포용
2	아시아인권문화연대(부천)	강남시장마을축제	참여
3	밀알어린이집(부천)	내외국인통합보육	포용
4	지구촌 어린이집(서울)	내외국인통합보육	역능, 포용
5	이주민방송MNTV(서울)	사법통역전문가 양성교육 키즈카페 겸 다문화 북카페	역능, 참여
6	지구촌 학교(서울)	대안초등학교	역능, 포용
7	지구촌 그룹홈(서울)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포용
8	이주여성지원센터(서울)	외국인미혼모 보호시설	포용
9	고려인 야학 너머(안산)	한국어교실, 방과후보육	역능, 포용
10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한국어교실	역능
11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예비사회적기업 지구별	역능

우리는 이들 기관에 대한 방문 조사와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설문 조사를 위해 조작적으로 정의했던 ‘사회통합’의 네 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외국인주민의 ‘역능’과 ‘포용’, ‘참여’와 관련한 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역능’은 외국인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 ‘포용’은 현행 정책의 사각 지대에 위치한 외국인주민 지원 프로그램과 활동, ‘참여’는 내외국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1. 역능 활동

방문 조사 기관의 대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외국인주민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외국인근로자, 고려인, 결혼이주여성, 이주배경을 가진 영유아 및 아동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교육, 직업교육, 내외국인통합보육 및 보육 기관 운영, 외국인 전문사법통역원 양성, 한국어교실 운영, 사회적 기업 운영, 보육·교육기관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85>

<표 85> 방문 조사 기관의 역능 활동

	기관명	활동	대상
1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직업멘토링, 이중언어교육	결혼이주여성
2	밀알어린이집	내외국인통합보육	이주배경영유아
3	이주민방송MNTV	외국인 전문사법통역원 양성	결혼이주여성
4	고려인 야학 너머	한국어교실 운영	고려인
5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한국어교실 지부 운영	외국인근로자
6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사회적 기업 운영	결혼이주여성
7	지구촌어린이집	보육기관 운영	이주배경아동
8	지구촌학교(대안초등학교)	교육기관 운영	이주배경아동

위 기관들이 외국인주민의 역능 지원 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언어 역량 강화이다. 언어 역량은 한국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성가족부 위탁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위탁 외국인력지원센터, 그 밖에 지자체 위탁사업 혹은 독자사업으로 민간단체들이 한국어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잉 혹은 중복사업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외국인 당사자들은 여전히 한국어 교육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응답했다.(조석주 외 2012)

고려인 야학 너머와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는 특히 한국어교육에 취약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고려인들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한다.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력으로 취업을 해야 한다. 혹 직업소개소나 지인 등의 소개로 취업을 하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전혀 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고려인들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고려인 야학 너머는 하루 일과를 마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는 매주 일요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센터에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는 시범사업으로 인근도시인 양주에서 순회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였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민간지원단체가 많지 않다. 상담이나 한국어 교육 등을 받으려면 교통이 불편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의정부까지 방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사업이다.

“여기 (의정부)센터 한국어 교실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아주 많아요. 의정부에 사는 사람보다 양주나 다른 인근도시 근로자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사는 데는 외곽지역이니 까 양주가 의정부 바로 옆에 있다고 해도, 여기 (의정부)센터까지 한국어 교육 받으러 오려면 왕복 2~3시간씩 걸리는 거죠.” (이영,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양주시의 경우, 외국인주민이 주민등록인구대비 5%를 상회하는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은 그 수요에 못 미치고 있다. 양주시에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대여하고,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의 한국어 강사 인력풀을 활용,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하였다. 또 양주시에 위치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는 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이 분포하는 반면,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외국인주민이 분포하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순회 한국어 교실과 같은 지자체별 방문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여기 경기북부지역에는 이런 한국어 교실이 지역마다 더 많아져야 해요. 의정부까지 오려면 힘들니까요.” (이영,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두 번째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립 지원 활동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야겠으나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었다.

결혼이주자 가정은 저소득 계층이 많고, 부부간 연령차가 커 취업에 대한 수요가 크다(이규용 2012). 현재 결혼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은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와 생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이 일부 제공되는 상황이다.

“입국 후 2~3년이 지나서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면 취업하고 싶어하지요. 출산, 자녀양육도 어렵지만, 실제 어떻게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몰라요. 간혹 취업하더라도 모국 출신 소개로 공장 노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장동만,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결혼이주여성에게 적합한 취업교육을 위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운영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직업동아리를 육성하고, 카페바리스타와 다문화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대부분 취업경험이 전무하다는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하

여 직업실무교육과 더불어 직업의식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취업경험이 있는 선배이주여성들과 직업멘토링을 장려하였다. 카페바리스타 교육생들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카페에서 바리스타로, 다문화코디네이터는 지역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기관에서 다문화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한국인 전문가에 의한 일방적 교육방식이 아닌 이주여성자조모임, 이주여성간 멘토링 등 이주여성 당사자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가는 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평택외국인복지센터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구별’이란 이름의 예비사회적기업은 유기농 쌀과자 제조업체 ‘지구별떡뽕튀기’, 재활용 의류를 리폼하고, 이주민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지구별나눔가게’, 결혼이주민미용사가 일하는 ‘아시아헤어샵’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위해 센터를 방문했을 때 헤어샵을 찾는 내국인 이용자들이 있어서, 내국인 이용자가 많은지 물었다.

“내국인, 외국인 모두 이용하는 가게고, 내국인도 많이 와요. 우리는 (헤어샵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외국인만을 위해 하지는 않아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살 아남을 수 있어요.” (김우영,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지구별떡뽕튀기’는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었고, 영유아먹거리회사에 납품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지구별나눔가게’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손님이 매장을 방문하고 있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한편 평택외국인복지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을 통역상담직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다.



지구별 나눔가게 외부전경



지구별 나눔가게 내부전경

이주민방송국MNTV는 결혼이주여성 역능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외국인 전문사법통역 아카데미 및 다언어정보센터 구축’사업을 2013,2014 두 해에 걸쳐 진행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거나, 쟁송을 하는 외국인들도 늘어가지만 공적 사법통역시스템이 없을 뿐 아니라, 민간에도 전문적 사법통역을 제공하는 곳이 없는 점에 착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위 제고를 통한 인식 개선이 중요한 목표였다.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회적 약자,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로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방법은 하나다.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숙, 이주민방송 MNTV)

실제 이 양성과정 참여자들은 이미 민간에서 통번역 일을 해 본 경험자들이 많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재단법인 동천 등 사법과 통번역 각 분야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였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미 민간단체나 지자체 위탁기관 등에서 통역업무를 해 본 유경험자였으며,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다. 그러나 자격증 등 공적 인증 장치가 없고, 전문 통역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일자리가 적어, 양성된 전문통역원을 취업과 연계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셋째, 이주자 2세대의 역능 강화이다. 일반적으로 이주아동의 보육, 교육문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의 총체적인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 외국인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는 여전하다.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고 언어소통 등 부차적인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내국인 아동들도 대기 상태인 터라, 굳이 외국인 자녀를 입소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한국적자인 다문화 가족 자녀의 입소도 반기지 않는다고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베트남 같은 친정에 갈 때 아이들을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결석일수가 일정 일수가 넘어가면 보육료를 반납해야 해요. 한국 아이들 같으면 그렇게 오래 (기간) 빠지지도 않고, 빠지더라도 이런 저런 행정처리가 손쉬운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엄마가 외국인이라 소통도 어렵고, 이래저래 번거로운 행정처리가 많으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아예 아이들 받기를 꺼리는 거지요.” (송연순, 밀알어린이집)

중국동포가 밀집한 가리봉동의 경우에도 완곡한 형태의 외국인 자녀 입소 거부가 공공연하다고 한다.

“미등록자 아니더라도 안 받아줘요.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외국인은 들어갈 때 1년치 원비를 선납하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아예 과외라는 거예요. 어차피 보육료 지원 시스템에 들어갈 아이도 아니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라는 거죠. 1년치 원비 내고 들어오면 좋구요.”(김현숙, 이주민방송MNTV)

밀알어린이집은 외국인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라, 기존부터 운영되던 일반 어린이집이나 외국인 아동 보육 경험이 오랜 시설이다. 외국인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과 더불어 내외국인 통합 보육이 내국인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방문조사지로 선정했다.

부천시 소사동에 위치한 밀알어린이집과 서울시 오류동에 위치한 지구촌어린이집은 일반 민간 어린이집으로 외국인 아동들이 재원중이다. 내국인 아동과 통합보육하는 이들 어린이집은 외국인 아동이 취학시에 어려움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아동의 입학에 흔쾌히 여기거나, 일상적인 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미등록, 외국인)아이들 학교가는 거 많이 좋아졌죠. 이제 인식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래도 아직 외국인 아이들 은근히 안 받으려고 하는 데들 있어요. 우리 학교에는 외국인 아동이 없으니, 외국인 아동 많은 다른 학교로 가는 게 아이에게도 더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아직도 자주 들어요**”(송연순, 밀알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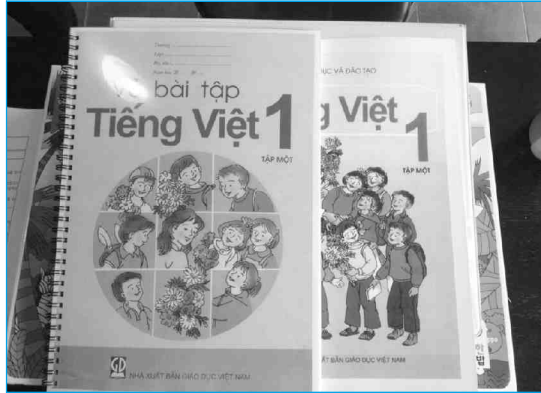
밀알어린이집은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중언어교육은 아동으로 하여금 엄마 나라에 대해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주여성의 위치를 재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정기적으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재원 아동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외국인 가정, 아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외연을 확대하고 있었다.

외국인 재원 아동은 매우 다양한데 최근에는 중도입국 영유아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중도입국아이들 큰 애들도 많지만, 아주 어린 연령의 아이들도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 애들은 아직 언어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표현은 할 수 없고, 낯선 한국어만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래서 ** 나라에서 온 아이는 처음엔 막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그랬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외국인 아이들이 왔을 때 말은 안 통하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막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림과 같은 보완대체언어를 사용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림은 다 통하니까. 이제는 나름대로 우리도 방법을 터득했지만 처음에는 무지 애먹었죠.”(송연순, 밀알 어린이집)



밀알어린이집 다문화교육 장면



베트남어 이중언어 교육교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와 결혼이주여성의 역능 강화를 위해 ‘이중언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언어강사가 주 2회,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아동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의 차별성은 첫째, 한국어가 아닌 베트남어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과 학업 성취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학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그 중 하나이다. 한국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나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엄마나라 언어를 배우는 이중언어교육은 무엇보다 엄마와 엄마나라에 대해 이해하게 됨으로써 가족간의 유대와 결속이 강화되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 언어습득 과정에서 엄마와 자녀간에 공통의 관심과 화제가 생겨남으로써 적절한 대화의 고리가 형성되기도 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자신의 가정환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건강한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한국인 교사가 아닌 해당국 출신 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그동안 사회통합의 전달체계는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한국적인 것을 전달해왔다면, 이 수업은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수업을 담당한다. 앞서 한국사회에 적응한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해 온 개인의 경험, 또 다문화강사로 경험한 사회적 경험 등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이주여성에게 전달하고, 조언하는 멘토의 역할을 한다. 강사는 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한 다문화코디네이터가 맡고 있었다.

2. 포용 활동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 그룹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기관을 방문 조사하였다. <표 86>

<표 86> 포용 활동

	기관명	활동	대상
1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보육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미등록 아동
2	고려인 야학 너머	방과후 보호	고려인 아동
3	이주여성지원센터	이주여성 및 영아 보호	외국인미혼모
4	지구촌그룹홈	그룹홈운영	이주아동 청소년

포용 활동은 주로 아동의 보육과 교육 관련 활동이 많았다. 외국인주민 집주지역에 위치한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와 고려인 야학 너머는 보육과 교육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외국인가정의 아이들을 종일 돌봐줄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마석가구공단 초입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출근 전 미취학 연령의 어린 자녀를 센터가 운영하는 보육실에 맡긴다. 취학중인 자녀는 방과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센터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시간을 보낸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며, 맞벌이 부부 가정인 것을 감안해 저녁식사를 제공한다.

고려인 야학 너머가 위치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은 국내 최대 고려인 집주 지역이다. 곳곳에 러시아어 간판을 볼 수 있고, 러시아어로 된 경찰서의 안내 현수막을 거리에서 볼 수 있다. 고려인들은 중국동포와 마찬가지로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동포와 달리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한다.

고용허가제 노동자와 달리 스스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고려인들은 구직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한국어 소통이 안 되어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다. 너머 관계자들은 이들 자녀들의 학교 전입학, 학교 생활 등 통역이 필요한 영역을 전부 지원하고 있다. 늦게까지 맞벌이를 하는 고려인 아동들을 위해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인근 태권도학원과 연계하여 태권도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한편 이주여성지원센터와 지구촌그룹홈은 시설보호가 필요하지만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유아를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아동청소년보호시설, 미혼모보호시설을 외국자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지원센터는 특히 외국인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

며, 지구촌그룹홈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주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다. 이 두 시설은 거듭되는 문의와 지원 요청 때문에 문을 열었다고 한다. 지구촌그룹홈의 경우 입소 문의가 끊이지 않으며, 시설의 수용 능력 한계 때문에 입소자를 더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포용활동은 외국인주민의 가족 형성이 증가함에 따라 좀 더 세밀한 사회안전망을 요청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출산, 보육, 양육, 의료 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내국인만을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책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자녀들도 부모가 맞벌이라면 보육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며,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 자녀들도 돌봄이 필요하다. 국적자가 아닌 경우 아동보호시설 입소가 사실상 불가하다. 위 기관들은 현재 사회안전망으로 포섭되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참여 활동

외국인주민의 사회 참여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알아보았다. 외국인의 사회 참여는 법적으로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점, 다수의 외국인주민이 장기체류가 불가한 체류자격을 가진 점 등 구조적인 한계도 분명하다. 다문화정책과 함께 각 종 위원회에 당사자인 외국인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늘어났지만, 이들의 참여가 실질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위원회 활동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또 내외국인의 지속적이고 질적인 교류를 증진시키는 참여 활동보다는 축제와 같은 일회적이고 보여주기식 참여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도 팽배하다. 외국인의 사회 참여의 당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참여 양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단체들은 어떻게 참여활동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87>

<표 87> 참여 활동

	기관명	활동	주대상
1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강남시장마을축제	내외국인
2	이주민방송MNTV	키즈카페	내외국인

‘강남시장 마을축제’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서 참여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강남시장 마을축제는 내국인만이 주최가 되어 진행되는 어느 지역축제나 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축제 등과 구분된다.

“강남시장 마을축제의 목적은 전통시장인 강남시장의 활성화예요. 이주민을 돕자거나, 이주민의 평등한 대우 요구가 주 목적이 아니라는거죠.”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강남시장마을축제는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강남시장으로 생활공간을 구성하는 내국인, 외국인 상인들이 함께 강남시장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강남시장 이용자를 알리는 공동의 실질적인 목표를 위해 열리는 축제이다. 강남시장마을축제의 차별성은 이 뿐만이 아니다. 축제 기획, 준비 단계부터 실제 진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시장상인회를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주요 참여 구성원으로 부천문화재단, 강남시장상인회, 주민동아리, 취미동아리 회원과 같은 동네 사람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등 그 폭이 넓다.

“요즘 여기저기서 축제가 많은데 용역업체가 행사당일만을 위해 준비하고 진행하는 ‘축제’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아니예요. 축제는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모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지 축제 행사날만 하는 축제는 축제가 아니예요.

작년에 한 앞치마 중창단도, 모여서 뭘 할까 고민하고 이야기하다, 노래는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상인회, 시의원, 주민으로 중창단을 구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대에 오른거예요. 강남시

장마을축제는 축제 전문기획자가 기획하고 대행하는 축제가 아니에요. 축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논의한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만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거죠”(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강남시장마을축제가 갖는 의미, 성과로 내국인과 이주민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라고 말했다.

“어떤 구조나 인식, 태도는 갑자기 변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일상적 만남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그런 환경에 노출되게 하고, 반복되게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해요. 직접적 경험이 고정화된 사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가 틀렸다, 이렇게 바뀌야 한다는 거 지적하고 가르치는 거 말고, 거부감 없이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만남의 성격도 즐겁고 유익해야지요.”

“얼마 전에 상인회 회장님이 먼저 각 나라 인사를 한국어로 표기해서 상점마다 배포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은 단체가 먼저 각 나라 인사말 만들어서 쪽 뿌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건 효과가 없어요. 우리 같은 단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자꾸 만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이게 강남시장마을축제의 진정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한편 이주민방송MNTV는 지역주민을 위한 키즈카페 겸 북카페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주민방송MNTV가 위치한 서울시 오류동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년 전만 해도 카페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방문시에는 카페는 여러 개 생겼지만, 아이를 동반해서 이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는 전무했다. 이주민방송MNTV는 이 점에 착안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외국인이 함께 이용하는 키즈카페를 겸한 다문화 북카페가 생긴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요즘 엄마들 애들 데리고 키즈카페 많이들 가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는 키즈카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내외국인이 같이 이용하는 키즈카페라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엔 다문화도서관을 해 볼까 했는데, 그럼 외국인들만 가잖아요. 그런 거 말고 외국인, 내국인 모두 모일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는데, 이 동네에는 키즈카페가 딱 알맞겠더라고요.” (김현숙, 이주민방송MNTV)

북카페는 서울시주민제안사업에 제안하였으나 결선투표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아 방문시에는 새로운 재원을 알아보고 있었다. 지역주민의 실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외국인 주민과의 접촉점을 만드는 사례로 지구촌어린이집을 소개해주었다.

“여기 어린이집은 인가받은 일반 어린이집이에요. 외국인이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외국인, 한국인 반반이에요. 여기 보내는 엄마들 반응이 좋아요. 시설도 좋고, 공간도 넓고, 프로그램도 운

영이 잘 되니까요. 서울에서는 이만한 시설, 공간 갖춘 어린이집 찾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거든요. 저도 우리 애들 보내고 싶어요.”(김현숙, 이주민방송MNTV)

두 기관 관계자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점은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이나 평등한 권리 실현은 구호나 당위를 통해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비자발적으로 동원되거나, 그저 일회적이거나 당위적인 만남을 통해 이웃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필요한데 그 접점은 지역사회주민들의 생활의 욕구나 필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4. 요약과 시사점

우리는 기관 방문과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역능을 강화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포용하며, 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능 활동의 주된 내용은 언어 역량 강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이주자 2세대의 역량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언어역량은 한국에서의 기본적 생활, 학업 성취와 직업능력 개발, 더 나은 취업활동을 위한 필수 역량이다. 다수의 외국인 지원기관들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기북부지역과 같이 인프라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고려인과 같이 한국어 집중 지원이 필요한 그룹 등 지역별, 대상별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황파악을 통해 이 같은 서비스 취약그룹 및 취약지역의 발굴과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일상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통역은 물론 사법, 의료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뢰할만한 공적 통번역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한다.

경제적 자립은 외국인 사회통합의 핵심영역 중 하나이다. 민간단체들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한국어 능력 정도, 직업경험, 직업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과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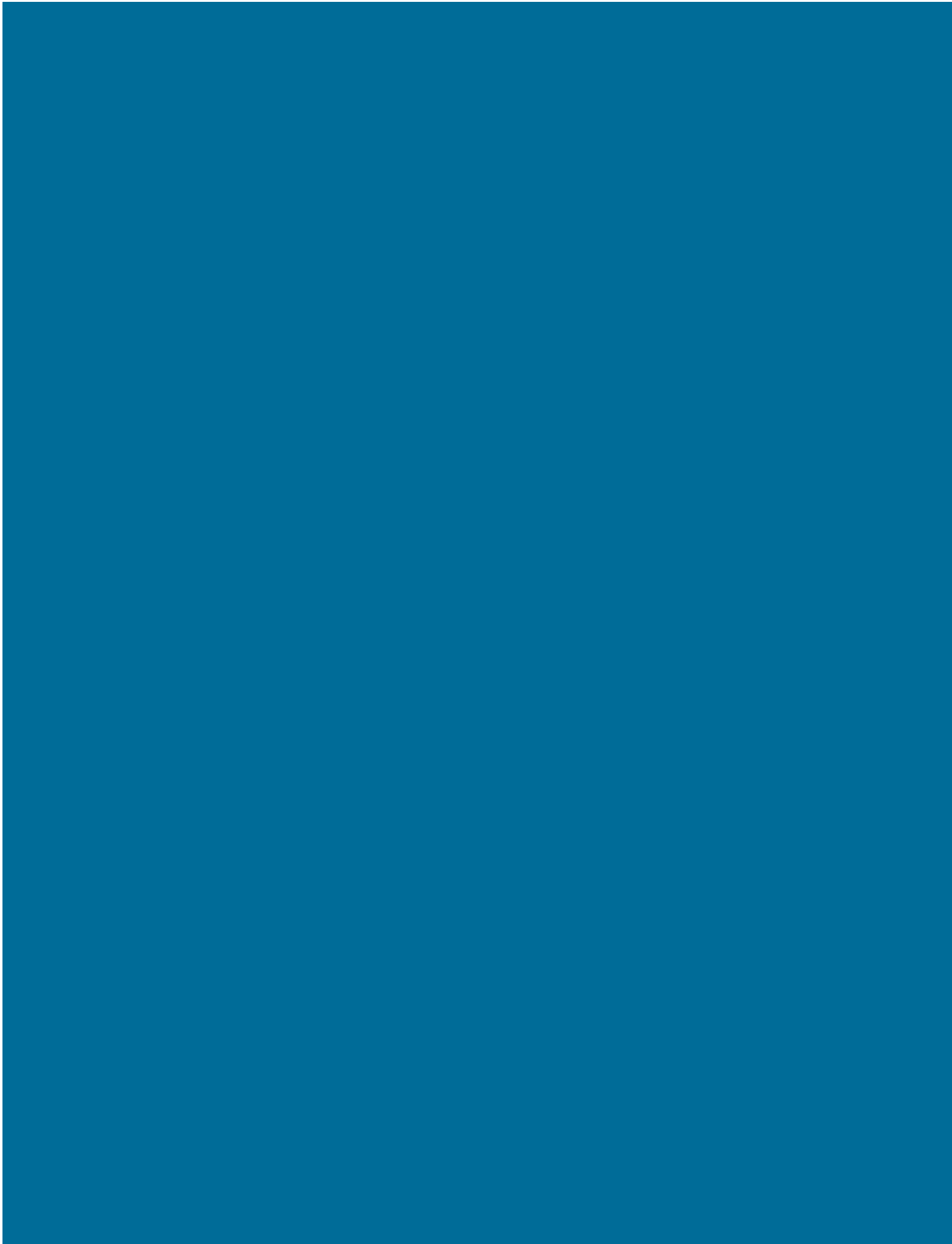
특히 이 과정에서 취업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취업준비여성간의 멘토링은 멘토에게는 자긍심을, 멘티에게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는 사회통합의 전달체계가 내국인이 이주민에게로 향하는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주자 내부에서의 활동을 통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주자 2세대가 여전히 보육, 교육서비스 접근과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제한은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기피와 같은 정서적인 이유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국인과는 다른 행정시스템 이용에 따른 불편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 의식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행정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외국인주민 수의 증가, 다양화, 체류의 장기화라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은 예견한대로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을 사회안전망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혼모 입소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 미혼모, 아동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 아동, 청소년,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 아동 등 현행법상 사회안

전망에 포섭되지 않는 외국인 주민, 특히 2세대의 포용은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거시적으로 현행법과 정책의 정비를 통해 이들 외국인 주민을 사회복지시스템안으로 편입함과 동시에 지역의 자원과 연계하여 서비스의 공백 없이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외국인주민이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내국인 주민과 공동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나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진다. 활동가들은 당위만으로는 참여 활동을 이어갈 수 없으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역의 일원으로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생활의제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같은 생계문제, 보육서비스와 편의시설과 같이 그 성격이 생활과 직결된 의제이어야 하며, 그 의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어야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내외국인 상인 모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편의시설은 내외국인 모두가 추구하는 결과인 것이다.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

V. 정책 제언

1. 몇 가지 시사점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었다.

1) 비제도적인 사회통합의 확산

이번 조사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사회통합의 네 가지 차원 곧 참여, 관계, 역능, 포용 등의 영역에서 응답자들의 선택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그것은 모든 외국인을 사회통합 정책의 대상으로 포용하지 않는 제도적 한계나 우리 사회의 통념 혹은 기존의 연구 가설들과 달리 외국인주민들의 한국 사회통합이 실질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다수가 비교적 젊고, 한국 체류가 4년 이하인, 남성, 등록 이주민들이 주류였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의 모든 범주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는 점은 제도 환경 혹은 체류 기간이나 체류 유형 등과 관계없이 외국인주민들의 ‘비제도적인’ 사회통합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비제도적인 영역에서 사회통합의 여건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과 그를 응답자인 외국인주민들이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열악한 생활환경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통합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다시 말해 한국의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 높은 모임 참여도 및 매체 이용율, 이웃과 한국인 친구에 대한 돈독한 신뢰도, 긍정적인 동네소속감, 삶의 만족도, 존중감, 시설탐방능력, 한국어능력, 희망 체류 기간의 장기화 등의 지표들이 외국인주민들의 생활 환경 자체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이 참여나 관심을 넘어 역능과 포용에 이르기까지 사회통합의 여러 영역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답변들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 환경 자체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입은 낮은 편이었으며 비정규 고용 상태에 있는 외국인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주거 환경은 매우 불안정했으며, 주거 이전의 자유 역시 제한된 편이었다. 외국인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사례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및 경제적 자립 그리고 2세대 지원에 있어서 여전히 공적인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과 대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미혼모 입소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 미혼모, 아동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외국적 아동, 청소년,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외국적 아동 등 공적인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는 다수의 외국인주민들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3) 욕구의 다원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외국인주민 혹은 이주민이라고 통칭될 수 있는 집단의 욕구가 결코 동질화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성, 연령대, 체류 자격 및 거주 지역에 따라 그들의 사회통합 정도와 수준은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인종/피부색 문제에 더 민감하며 모임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모임 참여 의사는 남성들이 높았다. 41세 이상 집단이 그 이하 연령대 집단에 비해 모임 참여도가 높았으나 향후 모임 참여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 집단이 등록 및 미등록 집단에 비해 인종/피부색 문제를 더 느끼고 있었으며 미등록 집단이 등록 집단 및 귀화 집단에 비해 지역 시설 단독 탐방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 7곳의 지역들 사이에서도 몇 가지 유의미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지역 거주자의 '이웃/한국인 친구' 신뢰도는 화성이나 평택 거주자보다 낮았다. 포천/양주 지역 거주자들이 안산/시흥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거주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기타 지역 거주자들은 포천/양주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모국문화 향유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들의 욕구와 관련해서 이번 조사에서 우리가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그들의 욕구가 한국인 연구자나 활동가, 정책 관계자의 관점과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이었다. 생활환경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었고, 연구 가설과는 다르게 높은 장소귀속감(동네 소속감)도 보여주었으며, 지역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한국인 학자들이 '다문화 정책의 합리적 핵심'으로 강조하는 '모국 문화 향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4) 사회통합 촉진 요인

설문 결과에 대한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는 경기도 외국인주민들의 사회통합 촉진 및 장애 요인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참여, 관계, 역능성, 포용 등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네 가지 영역들 사이에는 대체로 정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요소는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와 미디어 이용율이었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매우 공정'하다고 느끼는 집단은 다른 집단 보다 지역 상황 및 모국 문화 향유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이었다. 인종/피부색 문제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거리/상점/공공기관에서 차별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있었다.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에 가장 회의적인 집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집단들에 비해 매체 이용도가 매우 낮았다.

외국인주민들은 매우 능동적인 매체 이용자들이었다.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외국인주민일수록

록 ‘이웃/한국인 친구’를 더 신뢰하며 각종 모임 참여에 적극적이고 향후 지역 모임 참여 의사 역시 능동적임이 확인되었다.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인종/피부색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5) 강화된 역량과 생활 세계에서의 인종 차별

이번 조사는 외국인주민들이 기존의 조사들에 비해 자기 역량을 매우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시켜주었다. 외국인주민들의 ‘단독 탐방 능력’과 ‘한국어 향의 능력’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어로 향의하기 어렵다는 응답자도 33.9%에 달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만 한다.

통계 분석을 통해 우리가 밝혀 낸 외국인주민들의 사회통합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인종/피부색’ 차별 요인이다. 우리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비제도적 사회통합의 확산 및 외국인주민들의 강화된 자기 역량이라는 정책 환경과 관련하여 인종/피부색 차별 요인은 특히 주목을 해야만 하는 주제이다.

여전히 포용과 배제의 이분법을 기조로 사회통합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형편에서 비제도적 사회통합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통합 제도가 정비되기까지는 생활 세계 영역 혹은 ‘소셜 미디어’ 등 비장소적(비물리적) 공간이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의 주요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종/피부색’ 차별 요인은 그러한 비제도적 영역에서 자원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의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관련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택지에서 생활 세계의 주요 구성 부분인 ‘마트 등 상업 시설’이 5.7%로 최하위에 그쳤다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 제언

이번 조사 결과와 그로부터 얻어낸 시사점을 근거로 보다 효율적이며 활성화된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

우리 조사의 가장 큰 기여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주민의 실질적인 사회통합 자체가 매우 진전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면 사회통합을 키워드로 하는 정책 변화는 좀 더 적극적이며 전면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새로운 방안의 사회통합 정책은 무엇보다도 우리 조사에서 확인된 사회통합 층위들 사이의 간극, 이를테면 제도적인 사회통합과 비제도적인 사회통합, 전반적인 사회통합과 지역사회에서의 구체적인 사회통합, 주관적인 사회통합과 생활 세계에서의 일상적인 사회통합들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과제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보편적 서비스와 특화된 서비스의 조화

이번 조사에는 사회통합으로의 정책 변화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시사점이 함의되어 있다. 우선 ‘이주민’ 혹은 ‘외국인주민’ 등의 용어에서 연상되는 것과 다르게 실제 그들 내부에는 다양한 욕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차이에는 성별, 연령별, 비자 유형별 그리고 거주 지역의 차이가 포함된다.

사회통합 정책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설동훈·이병하 2013, 이현아 2013). 하지만 동시에 지역화, 개별화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지역과 모든 이주민 집단에게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지양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조용만·박성범 2013). 보편적인 서비스와 지역적이며 개별적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목록을 몇 가지로 제한하고 기타 서비스 기획 및 실행의 주도권을 지역사회에 이양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선원석 2015).

정책의 지역화와 관련 이를테면, 남양주시 화도읍, 안산시 선부동, 서울시 구로구 등과 같이 기본적인 생활 지원 인프라가 취약한 곳은 미취학 아동 보육과 교육, 방과후 보육, 통역 지원 등의 즉자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이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김포시, 화성시, 포천시, 양주시 등 외국인주민 수는 많으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거주함으로써 한국인들과 분리된 생활 환경이 조성된 지역에서는 접촉점과 교류 공간을 만드는 일이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지역과 같이 외국인 주민의 거주

분포가 산발적이고, 교통이 편리한 특정 지역에 거점형식으로 지원 인프라가 운영되는 경우 곧 외국인주민의 지원 인프라 접근이 용이치 않은 경우, 외국인주민의 참여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맞춤형 순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셈이다.

3) 당사자 리더의 발굴과 양성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정책은 외국인 내부에서의 갈등, 나아가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불신과 분열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 집단이 만날 수 있는 물리적 및 사회적 접점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와 관련 이러한 접점 곧 사회통합 정책의 공간적, 사회적 인터페이스에서 적극적인 조정 및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 리더의 발굴과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그러한 사회통합 인터페이스 리더 후보군은 능동적인 외국인주민 매체 이용자들이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사회통합 관련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존재를 발굴한 것은 이번 조사의 큰 성과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인터페이스 공간의 리더들은 결혼이주민을 비롯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그룹(결혼이주민, 자영업자, 영주권자 등)이 될 수 있다. 사례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그들은 취약한 이주민들의 멘토가 될 수도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접점이 희박한 지역의 외국인근로자들과 지역 주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성공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위해서는 이들 인터페이스 공간의 당사자 리더들을 정책 구성, 결정,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며 동시에 그들에게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일방적인 서비스에서 교류의 장 활성화로

사회통합은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상호적인 과정이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 사이의 단순한 접촉점을 형성하는 일을 넘어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소속감과 결속력, 경쟁력과 연대감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이 공간의 혼합,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구성원들간의 평등과 민주주적 관계의 형성, 모든 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 공통의 욕구와 목표의 설정 등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천 지역 강남시장 마을 축제는 이와 관련 아주 좋은 선례로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강남시장 마을 축제는 지역 상인, 주민, 외국인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축제와 교류를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접점이 취약했던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언어 지원이나 취업 교육 역시 일방적인 방식을 탈피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 역량 강화는 이주

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그것이 일방적인 책무나 기타 서비스 수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강요될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이용승·김용찬 2013, 강휘원·강성철 2010, 조용만·박성범 2013, 설동훈·이병하 2013).

언어 지원과 관련 두 가지 과제가 중요하다. 외국인주민들이 생활 세계의 긴박한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곧 통번역) 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여전히 많은 외국인주민들은 자녀의 학교 전입학이나 응급실 이용, 혹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통번역 지원을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 가지는 언어 지원 인프라 운영에 있어서 외국인주민 당사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역량 강화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외국인 유입을 정당화하는 주요한 논거 중의 하나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주민의 직업 교육 역시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해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다(강휘원 2010). 그러나 취업 교육 역시 이민자의 개인별 능력에 맞는 교육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조용만·박성범 2013)

5) 촉진 요인의 활성화와 장애 요인의 최소화

사회통합 정책의 성공은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 당사자들의 정확한 실태와 사회통합 수준 그리고 그에 근거한 요구를 읽고 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사회통합 촉진 및 장애 요인 관련해서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와 매체 사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효과적인 사회통합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정책 수요자들의 동의와 지지 기반 확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외국인주민 소셜 미디어 유저들을 정책의 키플레이어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의 여러 요소들과의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우리는 존중감, 소속감, 삶의 만족도 등이 높은 집단일수록 지역사회의 삶의 여건에 대한 평가나 모국 문화 향유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인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사회통합 정책이 단순히 도구적인 서비스 목록을 추가하는 일을 넘어서서 외국인주민들의 존중감과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일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장애 요인과 관련 가장 주목해야 하는 요인은 인종/피부색 차별 요인이다.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낯선 ‘인종주의’가 생활 세계 영역에서 외국인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사회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극복 요인이 아닐 수 없다.

6) 외국인의 지역사회통합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외국인의 지역사회통합과 관련한 공공 부문의 그간 간과되어 왔던 매우 중요한 역할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이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외국인주민들의 태도가 사회통합의 여러 요소들과 매우 긴밀하게 상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책의 공정성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할수록 사회통합의 적극적인 주체가 될 개연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것에 제한되었던 공공 부문의 역할은 향후 정책 실행 및 홍보라는 역할로 재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공 부문이 주관하는 외국인주민 교육의 내용 역시 변화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언어 및 직업, 인권 등 적응 및 통합의 ‘기술’과 관련된 교육들과 더불어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내용 자체를 정책 클라이언트들인 외국인주민들과 공유하고 그 정당성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포함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과제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는 적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를 근거로 유익한 통찰력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를 통해 애초에 목표로 한 ‘경기도형 사회통합 정책 모델’의 제안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사회통합 정책이 지향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정책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는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사회통합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적확하고 객관적인 외국인주민의 실태와 욕구의 파악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의 몇몇 결과들은 기존의 연구가설들과 통념들이 수정되거나 재해석될 필요성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주민의 욕구가 단일화될 수 없지만 과장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이번 조사의 주요한 성과 가운데 한 가지이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균형잡힌 정보와 인식이 선행될 수 있어야 하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연구진은 사회통합에 대한 선형적이며 환원론적인 접근은 지양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사회통합 정책은 정책 효과를 제고시킴과 더불어 연구자나 정책 관련자들에게조차도 공유될 수 있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비현실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한계는 성인 외국인주민으로 조사 대상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사회통합이 ‘보편적인 사회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회통합 조사에는 한국인 주민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주민 2세대 곧 이주 아동 및 청소년들 역시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후자에 대한 관심은 이주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의 성패를 쥐고 있는 주인공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여러 사정으로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이주아동청소년의 사회통합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방문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이들의 언어 및 직업 교육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한 정도이다.

이번 조사의 또 다른 아쉬움은 애초에 의도했던 경기도 지역 친화적인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모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간의 부족, 역량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다만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의 활성화를 위해 지향되어야 할 방향성 및 내용, 추진 방안 등과 관련 향후 유용하게 토론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들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위안을 삼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우리 조사가 향후 경기도 지역친화적인 사회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일에 있어서 유익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수많은 분들의 우정과 협력이 없었다면 이번 조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비 조사와 본 조사에 참여해 소중한 시간을 나누어주고 어려운 설문에 진지하게 임해준 560여분의 외국인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주민들과 우리 연구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 상담지원센터, 휴센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평택외국인복지센터, 평택대다문화가족센터, 김포시외국인주민복지센터,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양주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의집, 지구인의 정류장 등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들과 관계자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560여명의 외국인주민들을 만나는 일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귀 기관과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마음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사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자문역도 맡아 여러 훌륭한 조언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아시아인권문화연대의 이완 대표,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의 장동만 부장, 이은선 팀장, 김설이 팀장, 부천밀알어린이집의 송연순 원장, 이주민방송MNTV의 김현숙 피디, 고려인 야학 너머의 신기현 팀장,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이영 센터장, 평택외국인복지센터 김우영 사무국장께서는 더욱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

참고 문헌

- 강신욱. 2010. “OECD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의 이해”, 『보건복지포럼』 9월호.
- 강신욱·이현주·김석호 외. 2012.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통합위원회.
- 강휘원. 2010. “미국의 소수인종 통합정책 탐색: 교육, 복지,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0(1).
- 강휘원·강성철. 2010.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 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회보』 14(4):
- 고속희. 2008. “한국정부의 다문화사회 대응정책: 외국인 거주유형별 정책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3): 149-171.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3.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김미곤 외.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나. 2009. “다문화 사회의 진행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연구”, 『행정논총』, 47(4): 193-223
- 김미숙·김상욱·강신욱·정영호·김안나·조명래·이주연·하태정. 2012. 『사회통합 중장기 전략개발연구』.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범준·강명희·명정. 2007.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인문학적 이슈개발: 문화심리학에서 바라본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시민인문학』 제15호.
- 김성근 외, 2013.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갈등문제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김유경 외.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 2013.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사회』 14(1): p.3-30.

- 김이선·이아름·이은아.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정책 수요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천. 2012. “덴마크, 독일 그리고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비교연구”. 『독일어문학』 제57집.
- 김중세. 2013.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한 정책적 소고”. 『법과 정책 연구』 13(2).
- 김준현·문병기. 2014.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비교 연구: 국가 간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호.
- 김태원. 2010. “다문화현상에 대한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44: p.389-419.
- 노대명. 2009. “사회통합은 공동목표를 위한 대전제”, 『미래정책 포커스』 11-12월호 p.18-21
- 노대명. 2009. “사회통합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4월호
- 라휘문. 2011.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제고방안”. 『한국정책연구』 11(1).
- 문민, 2010.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유효성에 대한 진단과 개선과제”. 『미드리』 제1호.
- 문유경·전기택. 2011. 『남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경래. 2013.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기본소양 평가에 대한 고찰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단계평가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제26집.
- 박기관. 2011. “다문화시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1(1): p.193-213.
- 박명호·김정현. 2010. “다문화 가정의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복지행정논총』 20(1).
- 박선영. 2013.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정책: EU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5권.

- 박진경. 2012.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 사회통합 전략”.
『한국정책과학학회회보』. 16(1): p.23-48.
- 박진경·원숙연. 2010.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3): 191-217.
- 박혜숙. 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개선 방안:
독일 ‘통합과정’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인문학연구』. 제44집.
- 방승주. 2013. “사회통합과 헌법재판”. 『저스티스』 134(2): p.352-373.
- 사회조사센터. 2014. 『201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서은숙. 2013. “이민·다문화학생을 위한 학교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방향:
사회통합프로그램 분석을 기초로하여”. 『윤리연구』 제90호.
- 설동훈·김명아. 2008.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설동훈·이병하. 2013. “다문화주의에서 시민통합으로: 네덜란드 이민자 통합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1).
- 설동훈·임경석·정필운. 2014. 『외국인 주민등록 통합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 손기호. 2010. “질 높은 사회통합 정책목표와 성과평과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성순. 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4).
- 이수정. 2007.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인문학적 이슈개발:
다문화공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 『시민인문학』 제15호.
- 이영범·남승연. 2011. “다문화주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MIPEX를 기준으로 한 실증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2): p.143-174.
- 이재열 외. 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21권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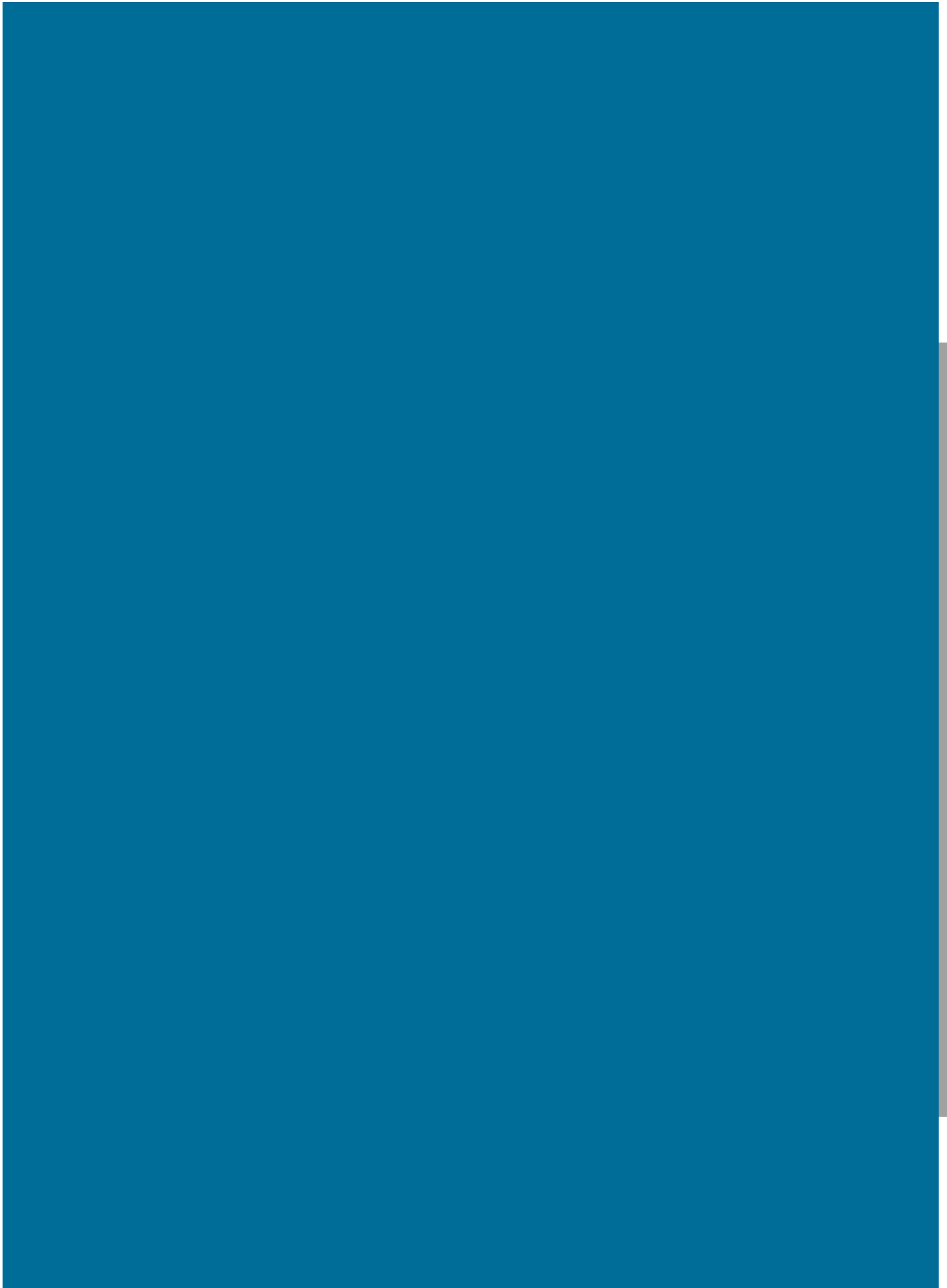
- 이호경.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여성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 『다문화콘텐츠연구』 9: p.187-207.
- 이현아. 2013. “다문화시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방향에 대한 일고찰: 네덜란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인간·환경·미래』 제10호.
- 이희길. 2013. “사회통합의 의미와 접근방법”. 『KIPA 조사포럼』6.
- 양기호. 2009. “일본의 다문화 거버넌스와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행정학회세미나』.
- 위인백. 2011. “인권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1(5).
- 장용석·박명호·오완근. 2011. “지표를 통한 한국의 사회통합 분석: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0권 제4호: p.1-38.
- 장용석 외. 2012.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권 5호: p.289-322.
- 전경옥 외. 2013.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측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정기선 외. 2011. 『인구구조변화 등에 대비한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방향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정기선 외. 2012.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중심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정기선 외. 2012. 『경기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분석 및 의제 발굴』. IOM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정기선 외. 2013. 『2013년 체류외국인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조석주·박지영. 2012.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세현. 『사회안전 제고를 위한 거주 외국인 사회통합 및 관리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조용만·박성범. 2013. “국제결혼이민자의 조기 사회통합증진 방안연구: 한국과 독일의 정책 및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3(2).
- 차미숙 외. 2011.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 차용호. 2009. “이민정책과 통합정책의 관계성 및 연계 방안 연구: 결혼이민자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3(1):p.165-200.
- 최무현. 2011.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5 : 다문화사회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병두. 2012. “초국적 이주와 한국의 사회공간적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47(1): 13-36.
- 최현실. 2009.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한국 사회통합 정책연구: 중국과 싱가포르의 상호성 원리의 한국 사회 적용가능성”. 『한국민족문화』 35.
- 허영식·정창화. 2012.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비교분석”. 『한국사회과학논총』 22(1).
- 한승준. 2008.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3): 463-486.
- 황정미. 2009.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증진방안 -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nd the other two authors were involved in the design of the study,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and the writing of the manuscript. The authors also acknowledge the support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in Drug Addiction (NIDA) and the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for their financial support.

References

- Adams, M. J., & Smith, R. G. (1997).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1998).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1999).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00).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01).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02).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03).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04).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05).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06).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07).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08).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09).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10).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11).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12).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13).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14).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15).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16).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17).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18).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19).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20).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21).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 Adams, M. J., & Smith, R. G. (2022).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A review of the neurobiology of drug addiction*. New York: Wiley-Liss.





2015년 경기도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기도 지원으로 「2015년 경기도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우리 경기도 특성에 맞는 외국인 사회 통합 정책 및
내외국인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지역 사회 공동체 개발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문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삶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7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오 경 석

※ 본 조사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적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tel_031. 492. 9347 email_gmhr@gmhr.or.kr 연구팀장 이경숙

1. 전반적 사항 General Information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1. 귀하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한국어 ② 이웃에 대한 신뢰 ③ 이웃과의 교류
- ④ 모국 문화 향유 ⑤ 경제적 자립

2.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곳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니까?

- ① 직장/일터 ② 공동체 모임 ③ 종교 시설
- ④ 마트 등 상업시설 ⑤ 공공시설 ⑥ 외국인 지원단체

3.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큰 문제이다	약간 문제이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인종	①	②	③	④
2. 피부색	①	②	③	④
3. 언어	①	②	③	④
4. 종교	①	②	③	④
5. 출신국	①	②	③	④
6. 경제력	①	②	③	④
7. 성(SEX)	①	②	③	④

4. 귀하는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공정하다 ② 조금 공정하다 ③ 별로 공정하지 않다 ④ 전혀 공정하지 않다

2. 참여 Participation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5. 귀하는 한국의 정치·사회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약간 관심이 있다
-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6. 귀하는 현재 한국에서 다음과 같은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항목	있다	없다
1. 가족이나 친척 모임	①	②
2. 직장동료 모임	①	②
3. 모국인 모임	①	②
4. 거주지 주민 모임	①	②

7. 귀하는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항목	예	아니오
1. 통장, 반장 활동	①	②
2. 방법기동순찰대	①	②
3. 지역 자원봉사단	①	②
4. 지역 스포츠 클럽	①	②

8. 귀하는 앞으로 얼마 동안 한국에 체류하길 희망하십니까?

- ① 1~3년 ② 4~6년 ③ 7~9년 ④ 10년 이상 ⑤ 영주 거주



9. 귀하는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 중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 ① 한국 내 가족 또는 친지 ③ 직장동료 ⑤ 공무원
 ② 한국 내 친구 또는 이웃 ④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 ⑥ 없다

10. 귀하는 다음의 사람들에게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합니까?

항목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 이웃	①	②	③	④
2. 직장 동료	①	②	③	④
3. 고용주	①	②	③	④
4. 한국인 친구	①	②	③	④
5. 한국인을 제외한 친구	①	②	③	④
6.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	①	②	③	④
7. 공무원	①	②	③	④

11. 귀하는 다음과 같은 매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항목	예	아니오
1. 인터넷 카페	①	②
2.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①	②
3. 트위터, 페이스북	①	②
4. TV 시청	①	②
5. 신문이나 잡지	①	②

12. 귀하는 현재까지 한국에서 이사를 몇 번 다녔습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6회 이상

4. 역능성 Social Empowerment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13. 귀하는 현재 사는 동네에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있다 ② 약간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14. 귀하는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④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15. 귀하는 다음의 장소를 혼자서 찾아갈 수 있습니까?

항목	예	아니오
1.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	①	②
2. 주민센터, 파출소,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	①	②
3. 지하철역, 시외버스터미널	①	②
4. 대형할인점, 백화점, 시장 등 상업시설	①	②

16. 귀하는 문제나 오해가 생겼을 때, 한국어로 항의할 수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 포용 Inclusion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17.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8. 귀하는 다음의 장소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습니까?

항목	매우 심했다	약간 심했다	별로 심하지 않았다	전혀 심하지 않았다
1. 거리나 동네	①	②	③	④
2. 상점, 음식점, 은행 등	①	②	③	④
3. 공공기관 (주민센터, 경찰서 등)	①	②	③	④
4. 직장/일터	①	②	③	④
5. 외국인 지원단체	①	②	③	④

19. 귀하의 거주 지역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일자리가 많다	①	②	③	④
2. 출신국 사람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3. 생활환경이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4. 주거비용이 싸다	①	②	③	④
5. 외국인 지원단체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6. 외국인 행정 서비스가 좋다	①	②	③	④
7. 자국어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20. 귀하는 한국에서 하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항목	매우 편하다	약간 편하다	별로 편하지 않다	전혀 편하지 않다
1. 모국의 음악, 영화 즐기기	①	②	③	④
2. 모국 전통의상 입고 외출	①	②	③	④
3. 공공장소에서 모국어로 대화	①	②	③	④
4. 모국 음식 먹기	①	②	③	④
5. 모국 종교 생활 유지	①	②	③	④
6. 모국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 활용	①	②	③	④

6. 개인정보 Personal Information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2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2. 귀하의 현재 나이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18세 ~ 20세 ② 21세 ~ 30세 ③ 31세 ~ 40세
 ④ 41세 ~ 50세 ⑤ 51세 ~ 60세 ⑥ 61세 이상

23. 귀하의 현재 사증(visa)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등록 ()
 ② 미등록



23-1. 귀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 | | | |
|-----------|-------------|--------------|
| ① 중국(조선족) | ② 중국(조선족 외) | ③ 베트남 |
| ④ 인도네시아 | ⑤ 필리핀 | ⑥ 태국 |
| ⑦ 캄보디아 | ⑧ 스리랑카 | ⑨ 우즈베키스탄 |
| ⑩ 몽골 | ⑪ 미얀마 | ⑫ 네팔 |
| ⑬ 러시아 | ⑭ 파키스탄 | ⑮ 방글라데시 |
| ⑯ 키르기스스탄 | ⑰ 동티모르 | ⑱ 기타() |

- ③ 한국으로 귀화

24. 귀하는 2015년 7월 현재까지 한국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입국의 경우 최초 입국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적으십시오.)

()년 ()개월

25. 귀하가 현재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안산시 ② 시흥시 ③ 포천시 ④ 화성시
 ⑤ 평택시 ⑥ 김포시 ⑦ 양주시 ⑧ 기타 지역

26. 귀하가 현재 경제활동(취업, 사업 등)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안산시 ② 시흥시 ③ 포천시 ④ 화성시
 ⑤ 평택시 ⑥ 김포시 ⑦ 양주시 ⑧ 기타 지역

27. 귀하의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27-1. 귀하의 지난달 총수입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 원 미만
- ② 100만~200만 원 미만
- ③ 200만~400만 원 미만
- ④ 400만~600만 원 미만
- ⑤ 600만 원 이상

② 아니오 

27-2. 귀하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 ② 자녀양육 때문에
- ③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 ④ 한국말이 서툴러서
- ⑤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 ⑥ 외국인에 대한 차별 때문

28. 귀하의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가족 

28-1. 함께 사는 사람을 모두 표시하십시오.

- ① 부모
- ② 배우자(사실혼 포함)
- ③ 자녀
- ④ 형제, 자매
- ⑤ 친척 등 기타 가족

- ② 친구
- ③ 직장동료
- ④ 혼자 산다
- ⑤ 기타 ()

29.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기혼
- ② 미혼
- ③ 동거(사실혼)

30. 귀하의 현재 주거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공장 내 기숙사
- ② 컨테이너
- ③ 식당
- ④ 여관
- ⑤ 비닐하우스
- ⑥ 상가
- ⑦ 주택
- ⑧ 아파트
- ⑨ 원룸
- ⑩ 고시원
- ⑪ 기타

31. 귀하의 현재 주거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자기 집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무료임차

32. 귀하의 생활비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 ① 식료품비
- ② 주거비
- ③ 자녀교육비
- ④ 여가생활
- ⑤ 통신비(전화, 인터넷 등)
- ⑥ 관리비(가스, 전기 요금 등)

33. 귀하는 모국에서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① 다니지 않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⑤ 2년제 대학 ⑥ 4년제 대학교
- ⑦ 대학원

34. 귀하의 현재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고르십시오.

- ① 개신교 ② 천주교 ③ 불교
- ④ 이슬람교 ⑤ 힌두교 ⑥ 기타()
- ⑦ 종교 없음

the 1990s, the number of people in the UK who are aged 65 and over has increased from 10.5 million to 13.5 million, and the number of people aged 75 and over has increased from 4.5 million to 6.5 milli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0).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of the need to address the needs of older people, and the need to ensure that the health care system is abl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The Department of Health (2000) has published a strategy for older people, which sets out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older people and the need to ensure that the health care system is abl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The strategy for older people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dependently and actively; (2)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access the health care services that they need; (3)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that affect their lives; and (4)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a safe and secure environment.

The strategy for older people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dependently and actively; (2)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access the health care services that they need; (3)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that affect their lives; and (4)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a safe and secure environment.

The strategy for older people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dependently and actively; (2)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access the health care services that they need; (3)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that affect their lives; and (4)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a safe and secure environment.

The strategy for older people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dependently and actively; (2)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access the health care services that they need; (3)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that affect their lives; and (4)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a safe and secure environment.

The strategy for older people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dependently and actively; (2)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access the health care services that they need; (3)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that affect their lives; and (4)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a safe and secure environment.

The strategy for older people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dependently and actively; (2)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access the health care services that they need; (3)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that affect their lives; and (4)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a safe and secure environment.

The strategy for older people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dependently and actively; (2)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access the health care services that they need; (3)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that affect their lives; and (4)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a safe and secure environment.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번 (초지동 667-2) 4층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전화. 031_492_9347 전송. 031_492_9349 누리집. www.gmhr.or.kr